

제1차 핵심정책 릴레이 워크숍

남부권 발전방안과 충남 균형발전의 과제와 방향

일 시 2023년 1월 26일(목) 14:00

장 소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남부권 발전방안과 충남 균형발전의 과제와 방향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① (지역현안 공감대 형성) 충남 도정을 선도할 핵심 이슈 및 현안에 대한 릴레이 정책세미나, 언론보도 등을 통한 공론화 추진
 - * 남부권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충남도정 주요현안 대응 전략과 과제 발굴
- ②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등 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한 남부권 등 낙후지역의 체계적·선제적 대응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 * 충남연구원이 주도하여 남부권 및 낙후지역에 대응한 체계적 연구 및 지원

2 개요

- 주 제 : 남부권 발전방안과 충남 균형발전의 과제와 방향
- 일 시 : 2023년 1월 26일(목) 14: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50명 내외
 - 발 제 : 한 상 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장 은 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김 명 숙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정 환 영 (공주대학교 교수)
 - 이 상 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김 갑 수 (굿모닝충청 편집국장)
 - 오 용 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 관련기관 : 충청남도 균형발전정책과 개발정책팀, 균형개발팀,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예산군 균형발전 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
 - 충남연구원 균형발전T/F

구분		세부내용	
13:30 ~ 14:00	30	티타임 / 사전등록	
14:00 ~ 14:05	5	개회식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이상준 (기획조정팀장)
14:05 ~ 14:10	5	개회사	유 동 훈 (충남연구원 원장)
14:10 ~ 14:15	5	축사	김 명 속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14:15 ~ 14:45	30	[발제 1] - 남부권 발전방안과 과제	한 상 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4:45 ~ 15:15	30	[발제 2] - 성장촉진지역 지원제도현황 및 추진 방향	장 은 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5:15 ~ 16:30	75	[종합 토론] · 좌 장 : 유 동 훈(충남연구원 원장) · 토론자 - 김 명 속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 정 환 영 (공주대학교 교수) - 이 상 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 김 갑 수 (굿모닝충청 편집국장) - 오 용 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16:30 ~ 16:40	10	폐 회	

제1차 핵심정책 릴레이 워크숍

남부권 발전방안과
충남 균형발전의 과제와 방향

발제 1

남부권 발전방안과 과제

한상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2023. 01. 26.

한상욱 연구위원



* 충남 남부권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균형발전 권역 중 금강권에 해당하는 6개 시군을 말함(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CONTENTS

1 / 배경 및 목적

2 / 남부권 특성

3 / 정책 동향 및 주요계획

4 / 남부권 전망

5 / 전문가, 주민 인식조사

6 / 발전방향 및 과제

1. 배경 및 목적

1

1.1 배경과 목적

✓ (인구 측면) 남부권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없고, 정주기피지역 전략 예상

- 인구 감소·유출과 더불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하는 부양비가 83%를 넘어 100%돌파 예상

✓ (산업 측면) 총생산규모가 12.95%로 낮고,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으로 지속적인 쇠퇴 추세

- 총 생산규모는 북부권 57%, 서해안권 30%, 남부권 13%로 상대적으로 약세
-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이며, 제조업 기반이 미흡한 계룡시, 금산군은 감소 추세가 뚜렷

✓ (정책적 측면) 공간구조상 북부권, 서해안권에 비해 국가·도정책의 상대적 소외지역

- 대전시·세종시에 연접한 전형적인 농산촌지역, 쇠퇴·소멸지역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태로 공공의 지원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

✓ (패러다임, 이슈) 대도시·산업·민간 중심으로 남부권의 정책적 이슈 선점, 기회 포착 어려움

- 지방소멸, 농산촌지역으로 저성장 상시화, 생산성 저하, 전동화로 인한 고용감소, 재정 압박 증가, 청장년층 조세부담 증가 등으로 발전기회상 우선 순위 선점 난항 예상

충남도내에서 낙후도가 심하고, 대도시 연접지역인 남부권을 중심으로 불균형을 완화하고, 협력적·공생적 발전을 위한 남부권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제시

2. 남부권 실태 및 특성

2.1 발전 수준 분석

✓ 남부권의 발전수준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 / 인구, 재정·소득 분야는 발전지역과의 격차 확대 추세

- 지역발전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주요 지표는 인구, 재정·소득분야이며, 이는 북부권이 월등히 높음
- 남부권의 발전지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며, 가장 낮은 하락추세를 보이는 시군은 금산군(-2.69), 청양군(-2.23)임

구분	표준화 점수			순위		
	2018	2021	증감	2018	2022	증감
천안시	19.82	18.28	-1.53	1	1	
공주시	-2.73	-3.69	-0.96	9	11	2
보령시	-4.20	-2.23	1.97	10	9	-1
아산시	16.57	16.40	-0.17	2	2	
서산시	5.84	5.54	-0.30	4	4	
논산시	-2.31	-3.14	-0.83	8	10	2
계룡시	9.25	9.04	-0.20	3	3	
당진시	1.08	0.67	-0.41	6	5	-1
금산군	0.78	-1.91	-2.69	7	8	1
부여군	-12.02	-12.20	-0.18	14	14	
서천군	-6.47	-3.92	2.55	12	12	
청양군	-12.60	-14.83	-2.23	15	15	
홍성군	1.29	-0.85	-2.15	5	6	1
예산군	-7.88	-5.54	2.33	13	13	
태안군	-4.80	-1.62	3.18	11	7	-4
남부권	-3.27	-4.46	-1.18			
발전지역	8.97	8.18	-0.79			
저발전지역	-5.80	-5.45	0.35			



주 1)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위한 인구, 재정·소득, 고용 및 산업, 인프라, 생활환경, 교육·문화, 복지 분야의 17개 지표를 분석함
 주 2) 발전지역: 15개 시군 중 표준화 점수가 평균 이상인 시군(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홍성)
 주 3) 저발전지역: 15개 시군 중 표준화 점수가 평균 이하인 시군(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2.2 인구

✓ 남부권의 65세 이상 인구는 28%로 초고령사회, 연평균 2.76% 증가추세로 활력이 매우 저조

- 남부권 인구는 충청남도의 19.26%를 차지하며, 영유아는 13.24%, 65세 이상은 27.9%를 차지
- 인구수는 발전지역 대비 27.9%, 영유아는 16.4%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며, 최근 지속적인 하락 추세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인구 비중	충남대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증감세	
				최근 10년간	최근 5년간		
충청남도	계	2,109,102			0.57	0.35	-0.22
	영유아	126,327	5.99		-2.03	-4.17	-2.14
	15세 이하	288,531	13.68		-1.9	-2.09	-0.19
	65세 이상	410,149	19.45		3.32	3.66	0.35
발전지역	계	1,457,516		69.11	1.42	1.11	-0.31
	영유아	101,656	6.97	80.47	-1.17	-3.53	-2.37
	15세 이하	226,554	15.54	78.52	-0.94	-1.33	-0.39
	65세 이상	210,966	14.47	51.44	4.2	4.63	0.43
저발전지역	계	651,586		30.89	-1.07	-1.23	-0.16
	영유아	24,671	3.79	19.53	-4.9	-6.57	-1.67
	15세 이하	61,977	9.51	21.48	-4.72	-4.62	0.1
	65세 이상	199,184	30.57	48.56	2.46	2.7	0.24
남부권	계	406,303		19.26	-1.12	-1.17	-0.05
	영유아	16,731	4.12	13.24	-4.82	-6.25	-1.43
	15세 이하	42,629	10.49	14.77	-4.55	-4.29	0.27
	65세 이상	114,555	28.19	27.93	2.31	2.76	0.45

자료: 통계청, 각년도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7

2.3 재정력

✓ 남부권의 수입액은 47.2조원, 재정력지수 0.2로 지자체 운영도 곤란한 상태

- 충남(시군 소계) 대비 남부권 비중은 18.69%이며, 재정력지수는 0.223으로 일반행정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
- 최근 10년간 수입액은 발전지역 대비 24%로 편차가 지속 확대 추세
- 발전지역 대비 수입액은 26%로 매우 열악하고, 수입액의 증가율도 발전지역에 비해 열악

(단위: 조원, %)

구분	2021			시군소계 대비 비중		최근 10년간			
	수요액	수입액	재정력지수	수요액	수입액	증감률		증감률	
						수요액	수입액	수요액	수입액
시군소계	677.6	252.6	0.373	100.00	100.00	342.6	127.6	6.93	15.98
발전지역	331.1	177.5	0.536	48.87	70.29	173.2	92.6	7.40	16.43
저발전지역	346.4	75.0	0.217	51.13	29.71	169.3	34.9	6.50	14.94
남부권	211.9	47.2	0.223	31.28	18.69	104.1	22.2	6.54	15.69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주1)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제7조, 시행령 5조, 별표1에 근거한 일반행정비(인건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문화환경비(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사회복지비(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 복지비, 보건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농업비, 임수산비, 산업경제비, 도로관리비, 교통관리비, 지역관리비)를 말함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8

주2) 기준재정 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 지방세법 규정 표준세율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말함

2 2.4 소득세할 주민세

✓ 남부권의 비중은 13.2%로 매우 낮아서 지역활력이 미흡하고, 농업기반의 산업구조에 대한 체질 변화 요구

- 시군 소계 대비 남부권 비중은 13.2%로 매우 낮으며, 이는 주민의 활력정도가 매우 미흡함을 나타냄
- 최근 10년간 증감량도 남부권이 저발전지역보다 증가량이 적게 나타남
- 공주시 9.7%, 논산시 8.2%, 계룡시 10.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부여군은 0.43%로 매우 저조함
- 다시 말해, 지역의 지탱산업이 농업기반 산업구조를 갖는 시군은 산업경제적인 체질 변화가 요구됨

(단위: 조원, %)

구분	2020	시군소계 대비 비중	최근 10년간	
			증감량	증감률
시군소계	62,531.9	100.00	30,380	6.88
발전지역	49,901.2	79.80	24,323	6.91
저발전지역	12,630.6	20.20	6,058	6.75
남부권	8,254.7	13.20	4,161	7.27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주) 주민세는 지자체가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 또는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세금이며, 이중 소득세할 주민세는 주민세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소득할 주민세 중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의 활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9

2 2.5 GRDP

✓ 시장가치는 충남의 1~3%대로 매우 낮으며, 제조업, 행정업, 농림업이 지탱 산업분야 저발전 지역일수록 행정, 공공서비스 투입, 공공 보조경제활동이 매우 높은 비중

→ 저발전지역 일수록 공공(행정)의 능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

시군별 GRDP 증감량 및 증감률(2015~2019) (단위: 십억원, %)

- 시장가치가 높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남부권은 충남의 1~3%대 비중을 차지
- 공주시 3.27%, 논산시 3.60%, 계룡시 1.33%, 금산군 2.01% 부여군 1.7%, 청양군 1.05%
- 실질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군은 계룡시, 금산군임
- 시군별 주요경제활동은 제조업(20%대), 행정업, 농림어업(10~20%대)이며, 발전지역 제조업(평균 60% 이상) 대비 상대적 미흡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 전통산업 및 압축 성장기 산업은 전반적으로 쇠퇴

구분	2019		시군별 비중		증감량		연평균 증감률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충남	113,488,325	112,302,545			12,189,194	11,003,414	2.88	2.61
남부권	14,693,806	13,801,362	12.95	12.29	1,438,302	545,868	2.61	1.01
공주시	3,712,791	3,429,667	3.27	3.05	515,422	232,318	3.81	1.77
논산시	4,080,662	3,833,843	3.60	3.41	541,060	294,261	3.62	2.02
계룡시	1,507,709	1,344,433	1.33	1.20	155,521	-7,755	2.76	-0.14
금산군	2,279,225	2,176,148	2.01	1.94	18,650	-84,427	0.21	-0.95
부여군	1,925,260	1,863,906	1.70	1.65	98,007	26,663	1.31	0.36
청양군	1,188,159	1,163,345	1.05	1.04	109,622	84,808	2.45	1.91

자료: 통계청, 각년도

남부권 시군별 경제활동 비중 순위(2019)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공주시	제조업(26.7%)	행정업(11.6%)	교육서비스업(8.2%)
논산시	제조업(23.9%)	행정업(15.0%)	농림어업(12.7%)
계룡시	행정업(63.3%)	교육서비스업(5.2%)	제조업(4.6%)
금산군	제조업(49.8%)	행정업(7.2%)	농림어업(5.6%)
부여군	농림어업(25.4%)	제조업(17.5%)	행정업(9.6%)
청양군	제조업(31.6%)	농림어업(15.9%)	행정업(11.4%)

주) 비중은 당해년 기준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10

2

<참고> 남부권 경제활동별 GRDP 증감량 및 증감률

(단위: 십억원, %)

구분	2019		비중		증감량(2015-2019)		연평균 증감률(2015-2019)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남부권	14,693,806	13,801,362			1,438,302	545,858	2.61	1.01
총부가가치	13,570,355	12,764,480			1,396,562	590,687	2.75	1.19
농업, 임업및어업	1,360,827	1,368,421	10.03	10.72	-151,242	-143,648	-2.60	-2.46
광업	27,079	25,579	0.20	0.20	-15,875	-17,375	-10.89	-12.15
제조업	3,500,173	3,401,428	25.79	26.65	307,745	209,000	2.33	1.6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0,377	37,585	0.22	0.29	-31,974	-24,766	-16.45	-11.89
건설업	664,758	564,467	4.90	4.42	61,535	-38,756	2.46	-1.65
도매및소매업	573,992	569,493	4.23	4.46	48,239	43,740	2.22	2.02
운수및창고업	365,978	402,369	2.70	3.15	-15,396	20,995	-1.02	1.35
숙박및음식점업	285,590	251,211	2.10	1.97	59,050	24,671	5.96	2.62
정보통신업	171,439	188,526	1.26	1.48	-2,423	14,664	-0.35	2.04
금융및보험업	460,892	455,900	3.40	3.57	76,237	71,245	4.62	4.34
부동산업	729,196	696,687	5.37	5.46	29,540	-2,969	1.04	-0.11
사업서비스업	616,340	547,993	4.54	4.29	106,714	38,367	4.87	1.83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574,023	2,256,744	18.97	17.68	534,284	217,005	5.99	2.56
교육서비스업	968,842	894,542	7.14	7.01	144,629	70,329	4.12	2.0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06,859	765,371	5.95	6.00	201,920	160,432	7.47	6.06
문화및기타서비스업	433,990	367,685	3.20	2.88	43,579	-22,726	2.68	-1.49

자료: 통계청, 각년도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11

2

2.6 사업체수, 종사자수

✓ 남부권의 사업체는 충남 대비 19.27%, 종사자수는 충남 대비 15.6%로 민간부문의 활력 정도가 매우 낮음

- 남부권의 사업체수는 16,660개로 충남의 19.27%. 대전시 근교지역으로서 사업체수가 저발전지역보다 낮음
- 종사자수는 122,899명으로 충남 대비 15.6%를 차지하며 민간부문의 활력 정도가 매우 낮음
- 사업체당 고용 인력수도 7.4명으로 낮으며, 가장 낮은 시군은 청양군(5.7명)임
- 사업체수, 종사자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부여군으로 사업체수 1.62%, 종사자수 0.97%임

(단위: 개, 인,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당종사자수
	개수 (2019)	시군소재 대비비중	최근5년간		명 (2019)	시군소재대비 비중	최근 5년간		
			증감량	증감률			증감량	증감률	
충남	86,455	100.00	18,321	4.88	784,919	100.00	148,060	4.27	9.1
발전지역	59,523	68.85	13,939	5.48	578,997	73.77	104,508	4.06	9.7
저발전지역	26,932	31.15	4,382	3.62	205,922	26.23	43,552	4.87	7.6
남부권	16,660	19.27	2,479	3.27	122,899	15.66	21,429	3.91	7.4

자료: 통계청, 각년도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12

2.7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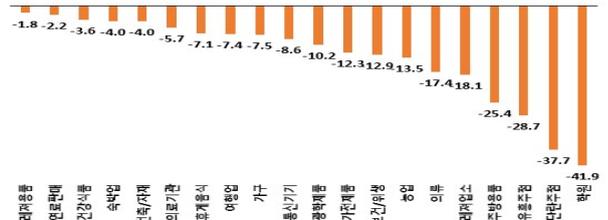
(단위:개.%)

구분	전체	소상공인	분포	비중
충남	104,986	84,132	100.0	80.1
남부권	20,640	16,820	20.0	81.5
천안	30,351	24,096	28.6	79.4
공주	5,571	4,503	5.4	80.8
보령	5,246	4,358	5.2	83.1
아산	16,743	13,035	15.5	77.9
서산	7,665	6,133	7.3	80.0
논산	5,435	4,379	5.2	80.6
계룡	1,504	1,205	1.4	80.1
당진	9,926	7,949	9.4	80.1
금산	3,542	2,937	3.5	82.9
부여	2,837	2,330	2.8	82.1
서천	2,490	2,014	2.4	80.9
청양	1,751	1,466	1.7	83.7
홍성	4,823	3,929	4.7	81.5
예산	3,914	3,111	3.7	79.5
태안	3,188	2,687	3.2	84.3

출처: 충청남도(2022)·부여·고용보험·비정형통계·사업장수동제(2023년 기준)

✓ 충남 소상공인의 20%,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규모의 경제 미도달

- 남부권의 소상공인은 81.5%를 차지 → 산업기반이 약하고, 규모의 경제 미도달
 - 주요 창업 증가 업종 : 자동차 판매, 직물, 용역서비스 유통업
 - 주요 창업 감소 업종 : 학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방용품, 레저업소, 의류, 농업
 - 영세화 업종 : 소상공인, 창작, 예술, 여가, 스포츠 관련업, 개인서비스업
 - 규모화 업종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공공행정
- 시군별 일자리, 청년 정책 추진시 정책적 합의 및 시사점



주요 창업 증가 업종(전년 동월비)

주요 창업 감소 업종(전년 동월비)

- 주1)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제2조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저발전지역일수록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규모의 경제를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주제인
 주2) 소상공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기준(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과 매출액(3년평균 10억이하 또는 120억원 이하(제조업))으로 분류
 주3) 본 분석에서는 고용보험 비정형통계에서 제공하는 기업규모별 통계를 활용함에 따라 세부산업별 상시근로자수만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정의, 기타 소상공인 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4)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1인(가족형태)이 운영하여 고용보험 의무대상 가입이 아닌 자영업자 추이는 별도로 분석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13

2.8 역내외 소비 비중

✓ 남부권 역내 소비 819.9억원, 12.5%, 역외 소비 200억원, 13.2%

- 역내 소비 순 : 논산시 304억, 공주시 205억 / 부여군 116억 / 금산군 84억, 청양군 62억, 계룡시 22억
- 역외 소비 순 : 논산시 63억, 공주시 54억 / 금산군 31억, 계룡 24억, 부여군 20억 / 청양군 9억
- 역내 유입 소비 순 : 공주시 624억(241.3%) / 논산시 115억(31.5%), 금산군 73억(63.3%), 부여군 72억(52.8%)

(단위: 백만원%)

구분	충청남도	남부권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소비액	비중							
역내	개인	513,956	64,562	12.56	15,248	24,624	4,315	5,742	9,527	5,106
	법인	140,672	17,423	12.39	5,243	5,729	600	2,660	2,112	1,079
	소계	654,629	81,985	12.52	20,491	30,353	4,914	8,402	11,639	6,185
역외	개인	113,834	15,309	13.45	4,076	5,009	2,176	1,793	1,643	613
	법인	37,994	4,689	12.34	1,276	1,295	213	1,310	308	287
	소계	151,828	19,998	13.17	5,352	6,304	2,389	3,103	1,951	900
타지역에서 역내로 유입된 소비	개인	210,596	70,697	33.57	49,409 (255.7%)	8,835 (29.8%)	1,594 (24.6%)	5,221 (69.3%)	4,739 (42.4%)	898 (15.7%)
	비중	70.1	76.5	109.1	79.2	76.6	64.1	71.6	66.0	57.3
	법인	89,829	21,718	24.18	12,949	2,703	893	2,065	2,441	667
	비중	29.9	23.5	78.6	20.8	23.4	35.9	28.3	34.0	42.6
소계	300,426	92,415	30.76	62,358 (241.3%)	11,538 (31.5%)	2,486 (34.0%)	7,287 (63.3%)	7,180 (52.8%)	1,566 (22.1%)	

주1) 주1) 역내 소비 비중 : 시군내 고객이 시군내에서 소비한 비중

주2) 역외 소비 비중 : 시군내 고객이 시군 외지역에서 소비한 비중

주3) 타지역인이 역내로 유입된 소비 비중 = 타지역 고객이 시군내로 와서 소비액 / 시군내 소비액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BC카드 충남지역내·외 소비데이터(시군구), BC카드 고객 기준(4월 누계 소비액), 202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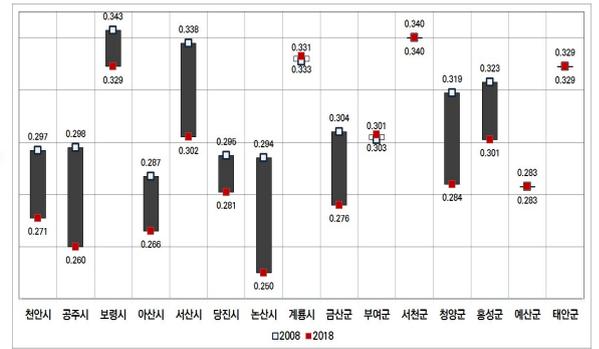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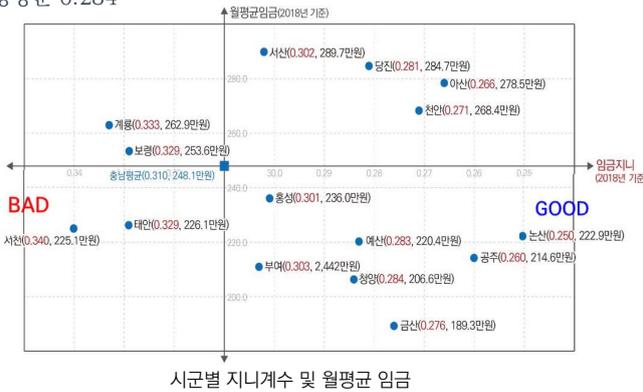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14

2 <참고> 월평균 임금 및 지니계수

✓ 발전지역 대비 임금격차는 560만원/년 발생, 제조업은 9.8백만원/년 → 소득대비 인구 유입에 한계로 작용

- 제조업의 발전지역 대비 임금차는 9.8백만원/년으로 가장 큼
- 농어업, 도소매업의 격차 발생 여전, 숙박음식업은 역전 현상
-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양호한 편 → 업종별 다양성이 낮음
- 공주시 0.260, 논산시 0.250, 계룡시 0.333, 금산군 0.276, 부여군 0.303, 청양군 0.284

구분	지니계수			월평균 임금
	2008	2018	증감	2018
충남	0.312	0.294	-0.018	241.5
천안	0.297	0.271	-0.026	268.4
공주	0.298	0.260	-0.038	214.6
보령	0.343	0.329	-0.014	253.6
아산	0.287	0.266	-0.021	278.5
서산	0.338	0.302	-0.036	289.7
논산	0.294	0.250	-0.044	222.9
계룡	0.331	0.333	0.002	262.9
당진	0.296	0.281	-0.015	284.7
금산	0.304	0.276	-0.028	189.3
부여	0.301	0.303	0.002	244.2
서천	0.34	0.340	0.000	225.1
청양	0.319	0.284	-0.035	206.6
홍성	0.323	0.301	-0.022	236.0
예산	0.283	0.283	0.000	220.4
태안	0.329	0.329	0.000	226.1
발전지역	0.312	0.292	-0.020	270.0
저발전지역	0.312	0.295	-0.017	222.5
남부권	0.308	0.284	-0.024	2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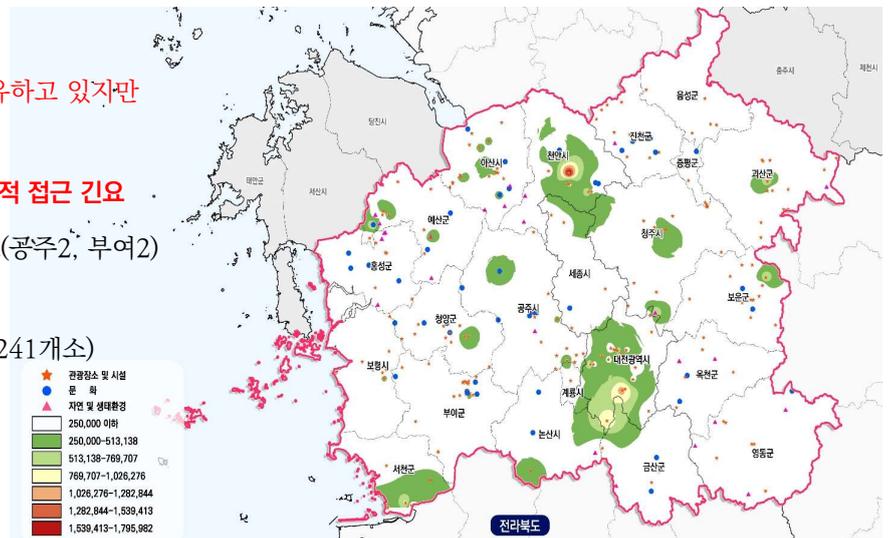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2020),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 방안 연구

2.9 문화관광시설

✓ 다양한 관광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호간 연계성 미흡 ↔ 관광객 수용력은 대전시, 세종시 집중

- 관광진흥 정책상 중요한 대표 지점을 선정하고 관리 → 주요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주변관광지점들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는 것이 중요
- 남부권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계 관광이 부족
- 주변 연계관광 통합 추진하는 산업적 접근 필요
- 관광객 수용시설은 남부권 4개소(공주2, 부여2) 불과
- 여행업도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241개소)
 - 대전 593개소, 세종 105개소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수에 의한 영향권

3. 정책 동향 및 주요 계획

3 3.1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 인구감소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와 부정적 파급효과 막대

■ 인구사회적 변화

- 저출산·고령화·다문화
- 인구절벽·지방소멸위기
- 지역 양극화 심화
- 지속가능한 발전 위기
- 지방분권 요구 증대

■ 공간적 변화

- 공간 이용 감소
- 신규 개발수요 감소
- 공간 효율화 불가피
- 복지시설수요 증가

■ 경제적 변화

- 저성장·뉴노멀 상시화
- 생산성 저하
- 복지수요 증가
- 재정압박 증가
- 청장년층 조세부담 증가
- 경제협력 확대

■ 농어촌인구 비중 약 8%(2040) 예측(UN)

- 인구 6만 미만 시군 매우 심각(김순은, 2016)

■ 농어촌,도농복합지역 GDP기여율 지속 하락

- 농림수산업, 전통제조업 붕괴 우려(김현호, 2018)

■ 도시 농촌간 인당GDP 불평등도 지속 상승

- 대도시(민간, 권력) 중심의 정책 추진

3

3.2 지역정책의 양축 가시화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지향(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요구)

- 균형발전 : 수도권 대응 경쟁력 확보, 지방의 자립적 발전, 사회적 정의 실현(헌법 제120조 제2항, 제22조, 제123조 제2항)

구분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 특성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경쟁, 효율 / 자주, 참여, 자율, 책임 • 지역능력의 최적화(local optim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배려, 형평 / 통합, 통일 • 최소기준의 확립(National Minimum)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상황적 정책 • 차별성과 경쟁을 전제 • 재화 생산방법의 이양적 성격 • 수단적 성격의 정책 • 공유재산 성격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시적 정책 • 차별성의 축소 • 재화의 이양적 성격 • 최종 목표적 정책 • 사유재산 성격의 정책
정책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행정권한 및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산업의 지역적 배분 • 지역의 혁신정책 • 공공시설의 분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권형 정치·행정체제(분권형 거버넌스) • 지역발전의 균등한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균형발전(수도권/비수도권,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 • 집권식 재원의 강제 배분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사무의 지방이양, 수평적, 수직적 조정제도 • 재원의 수요를 연차적 처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수직적 조정제도, 수평적 재정 조정 • 정책집행초기부터 막대한 지원 필요
정책 행위 자	중앙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정치·행정권한 이양이므로 소극적 태도 • 선거의 활용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의 중앙집권식 배분이므로 상대적 소극적 • 선거 활용도 높음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동일적 의견수렴 용이 • 지자체간 합의가 상대적 용이(재정분권 제외) • 공유재산 성격으로 정책 열의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화된 갈등구조 • 지자체간 갈등 소지 큼 • 재원 이양으로 인해 정책 열의 상대적 높음

자료: 박진경 · 이재연(2018),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정 정리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19

3

3.3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 3대 전략 :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강화, 고유한 특성 발현 지원 + 관련 법·추진체계 정비

- 지역주도 균형발전 + 혁신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특성 발현 및 지원
- 주요 과제 : 기회발전 특구 + 교육자유특구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지방대학 살리기
- 균특회계 규모 : 22년 대비 1.8조 증가(22년 10.9조원 → 23년 12.7조원)
- 실질투자금 14.8조원 : 균특회계 12.7조 + 지방이양 1.1조 +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
- 시군포괄보조사업 개편 : 22년도 13개 포괄보조사업중 6개 지방 이양 + 타 회계·기금 균특 자율계정 이관 + 낙후지역 지원 강화(포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 5%p)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분	'05	'20	'21	'22	'23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	9.2	10.3	10.9	12.7
(지역자율계정)	(4.1)	(2.3)	(2.5)	(2.3)	(2.4)
(지역지원계정)	(1.3)	(6.6)	(7.5)	(8.2)	(10.0)
(제주·세종계정)	(-)	(0.3)	(0.3)	(0.4)	(0.3)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20

3

3.4 충청권 메가시티,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 ✓ 충청권 메가시티 : 대전, 청주, 세종, 천안·아산 중심의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 ✓ 광역도시계획 :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및 발전축 구상

- 문화관광브랜드, 국제화 외의 남부권 관련 내역 매우 미흡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

4차 산업혁명 혁신생태계 **초광역 균형발전 허브**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미래성장 주도하는 국가성장 **新수도권**
균형발전시대 초광역 차원 연대·협력 지역대응시대 **기동 분담 네트워크**

비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혁신성장 거점 -

목표 01. (산업경제) 글로벌 경쟁력 기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충청권 광역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메가시티

- 전략 1. 충청권 연결의 경제 실현을 위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 전략 2.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R&D 플랫폼 구축
- 전략 3. 혁신지원 연계 거점 기반 확충과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

목표 02. (광역인프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초광역 스마트 인프라 조성

충청권 생활권 광역화하고 광역화할 수 있는 메가시티

- 전략 1. 글로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구축
- 전략 2. 충청권 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 전략 3. 충청권 스마트드라인 구축을 위한 초광역 생활권 서비스 기반 구축

목표 03. (사회문화) 지역성 기반 충청민 문화관광 함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충청민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강화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메가시티

- 전략 1.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행정력·실행력 강화
- 전략 2. 충청권 문화관광 국제화 및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 전략 3. 충청권 문화·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 발전축, 교통축의 연계성 강화
-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및 대전 세종 환상형 교통축 마련

비전
[**신 국토중추** **신 광역생활경제권** **광역도시권**]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

목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신 국토중추** + 국제 경쟁력을 가진 **신 광역생활경제권** + 함께하는 상생·협력 **신 광역도시권**

전략

신 국토중추	전략1 행복도시권을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
	전략2 행복도시권의 행정기능 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 실현
신 광역생활경제권	전략3 수도권과 동반성장을 이룬 미래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
신 광역도시권	전략4 행복도시권의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 형성을 통해 일자리 및 정부행정 서비스 증진
	전략5 행복도시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시설 배치 및 교통연계 강화
	전략6 탄소중립, 기후 변화, 저탄소화 등 행복도시의 주요현안 공동대응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21

3

3.5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

- ✓ 4대 권역별 성장거점 동력과 연계한 성장거점 사업에 착안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 도입(2007)

- 정책형성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5, 수립시) →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구상(2006)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2007)

- ✓ 당초 목표 : 골고루 잘사는 강한 충남(2008)

구분	단기(2010년)	중기(2015년)	장기(2020년)
	지역균형발전 추진	충남의 신성장축 구축	골고루 잘사는 강한 충남 구현
목표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및 개발거점 기반 마련 (충청남도내 북부지역과의 경제력 격차 최소화)	종합적인 지역개발 추진으로 사업시너지효과 창출 및 개발거점 구축 (시·군간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체계 구축)	개발거점간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로 코리도 조성 (균형발전대상지역을 관광, 산업의 메카로 건설)

- ✓ 현재 : 제2단계 제1기(2021-2025)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중

- 제1단계 사업(2008-2020) : 총사업비 1조 909억원(연 약800억원 규모, 제1기 54지구 4,453억원 / 제2기 68개 지구 4,103억원 / 제3기 76개 지구 2,353억원)
- 당초 목적 대비 달성도가 미흡하고 사업방향이 변질되었다는 비판(시군 현안사업)
- 산업·경제분야보다 소규모 관광시설(82지구)조성에 투자되어 사업효과 반감되었다는 지적

3

3.6 시군별 주요 발전 방향

✓ 2000년대 초반 대비 시대 흐름에 따라 유의미한 방향으로 전환 ↔ 일부 시군 기본계획과 정합성 미흡

- 공주시 : 역사문화도시, 스마트 도시 / 5도2촌 → 세계적인 역사도시
- 논산시 : 도농 통(복)합형 전원도시, 행복도시 → 국방 지원 역사문화도시
- 계룡시 : 전원, 문화, 국방 모범도시, 명품도시, 스마트 자족도시 → 사람중심 청정도시
- 금산군 : 배후전원지역, 전원도시 → 인삼약초 특화도시
- 부여군 : 청정농업지역, 문화관광중심지역, 고도 → 동아시아 문화 수도
- 청양군 : 생태영농지역, 청정자연생태낙원 → 행복공동체 휴양도시

구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당초계획 (01)	금강과 어울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교육 도시	첨단농업의 도·농통합형 전원도시		인삼과 약초, 산악자원이 어우러진 배후전원지역	전통의 역사 문화가 있는 청정농업지역	청정 자연경관을 갖춘 친환경 생태영농 지역
	수정계획 (08)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SMART CITY	도농복합형의 자족형 전원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전원·문화·국방의 모범도시	자연과 생명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전원도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관광의 중심지역	에코 파라다이스(Eco-Paradise) 청양
	재수정계획 (12)	기업하기 좋은 5도2촌 주말·관광·SMART CITY	활력있는 경제도시, 자연과 문화가 하나되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있는 명품도시	자연과 생명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전원도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스마트 Greenomics 부여	충남의 중심, 청정자연생태낙원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공주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세계적 역사문화도시	따뜻한 행복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국방지원, 역사문화도시	대한민국 국방의 메카, 스마트 자족도시 계룡!	모두가 누리는 행복터전, 살기좋은 인삼약초 특화도시	공존과 상생, 동아시아 문화수도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행복공동체 휴양도시, 청양	
시군 별 기본계획	날마다 흥미진진 백제왕도 공주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논산	민관군이 하나가 된 사람중심의 청정도시 계룡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공존과 상생, 동아시아 문화수도		

주1)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목표연도는 2040년임
 자료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재수정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 2035 논산도시기본계획, 2035 계룡시도시기본계획, 2040 금산군기본계획, 2040 부여군기본계획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23

3

3.7 시군별 주요 사업

✓ 지역내 관광·교류 중심의 사업 계획, 제조업·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미흡 / 시군별 연계·협력 도모 필요

- 도시개발 : 공공기관유치, 외연적 확산 기초 여건
- 첨단산업 : 바이오, 생명공학 관련 산업 중심
- 향토산업 : 기존 자원 활용한 클러스터 형성을 목표
- 관광·교류 : 시군별 부존자원 시설 중심/콘텐츠 미흡

구분	도시·거점 개발	농림업(향토산업)	제조업·첨단산업	관광	문화예술·교류·협력
공주시	·KTX공주역 성장거점육성 ·세종시 인접지역 2단계이전 공공기관유치	·공주푸드복합타운육성 ·거점산자유동센터(APC)	·첨단·바이오산업육성 및 연구기관 유치 ·남공주 일반 산업 ·상생 일반 산업 ·신공주 일반 산업	·금강 수변공간 역사 공원 ·백제 문화스타케이션 ·금강변 공나루 역사탐험선 ·자전거 천리순환길 ·유니버설 스마트 전망대	·백제의 문화예술 복원 ·충고제 만소리 복원 ·공주문화공연장 ·제민천 유지업 ·공주 봉황예술마당 ·금강내 고마수상예술공원 ·계룡산철화분청사기도요지
논산시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최가래 온라인시스템 ·젓갈식품클러스터	·대둔산권역 라이프 케어산업 ·폴리텍대학, 건양대학교(병원) 융복합컴플렉스 조성추진 ·국방국가산업단지 ·전력지원체계 혁신생태계 조성	·밀리터리 한류 콘텐츠 ·탐정호 민자 유치	·강경읍 근대역사·문화자원 ·충청 유교문화원 광역 관광개발
계룡시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계룡대실지구·하대실지구 도시개발			·국방 안보 관광 클러스터 ·왕자산 산림복지단지	·2021계룡세계평화문화엑스포
금산군		·건강과 힐링 테마 6차산업 ·세계 중요농업유산 홍보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인삼 파생 산업 육성	·금강 친환경 강변길 ·한방·의료·관광·휴양기능 융·복합광역클러스터	·국제박람회
부여군		·스마트팜 콤플렉스지원센터 ·무인자동차 농업생산단지 ·스마트 원예단지 ·유기농 6차산업 지원단지	·바이오소재 국산화 허브단지 ·바이오산업특화형 일반 산업	·스마트100JE(백제)타운 ·부여군-공주시간 스마트 헤리티지벨트 ·송국리유적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백마강 일대 정비 ·고대백제 수도 경관	·고대해상실�크로드복원 ·국립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고천면역사박물관 ·고대삼국축제(엑스포)개최 ·국내·외 문화예술 축제
청양군		·스마트팜 단지 ·관광자원 연계 특화 타운 ·목적 산업 클러스터 ·정원 산업	·일반 산업 ·경쟁력 우위 업종 유치 ·생명공학 연구기관 유치	·농특산물 관광브랜드 ·철강산, 천정호 추가 관광 상품	

자료: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주요사업자사정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24

4. 남부권 전망

4.1 인구 전망

✓ 계룡시를 제외한 5개 시군 인구 감소(45천명 감소, 2040) 전망 + 면지역 인구 감소 뚜렷

- 인구 감소율 : 논산시 -2.1% >> 공주시 -1.2% > 부여군 -0.3%, 청양군 -0.2%, 금산군 -0.1%
- 읍면동별 인구 전망 : 동지역은 인구 증가 / 읍지역은 보합 / 면지역은 대폭 감소
- 면지역 인구 감소세 심각
 - 공주시 : (3천명대)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사곡면, 신평면
 - 논산시 : (3천명대) 강경읍, 상월면, 연산면 (1천명 이하)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부석면, 벌곡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 금산군 : 금산을 제외 1-2천명대
 - 부여군 : (3천명대) 은산면 (1천명 이하) 양화면
 - 청양군 : (3천명대) 정산면

(단위:인,%)

구분	2021	2025	2030	2035	2040	증감량 (21-40)	연평균증감률 (21-40)
남부권	396,781	403,749	385,051	367,601	351,352	-45,429	-0.638
5개 시군	363,450	354,409	334,612	316,049	298,588	-64,862	-1.029
공주시	103,145	99,261	93,611	88,044	82,486	-20,659	-1.169
논산시	114,483	109,011	96,535	84,907	76,093	-38,390	-2.127
계룡시	33,331	49,340	50,439	51,552	52,764	19,433	2.447
금산군	50,477	51,811	51,383	51,023	49,647	-830	-0.087
부여군	63,774	62,765	61,640	60,648	59,734	-4,040	-0.344
청양군	31,571	31,561	31,443	31,427	30,628	-943	-0.159

주1) 5개 시군은 계룡시를 제외한 수치임

주2) 인구추정방법은 통계청 미래인구 추계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미래인구를 추정하였으며, 비요소적 방법에는 등차급수, 등비급수, 최소자승, 지수함수, 로지스틱 함수, 수정지수함수를 요소적 방법에는 생산모형조성법, 코호트법을 적용하였으며, 적합도 검증은 MAPE(mean absolute percent error)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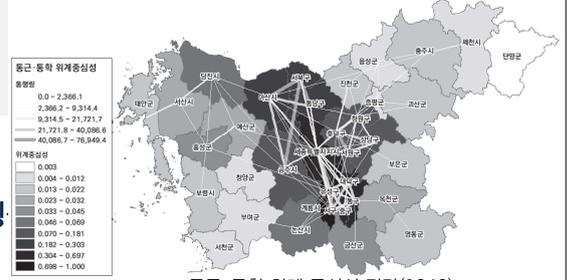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2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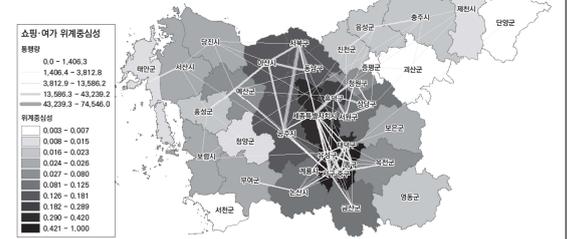
4.2 공간구조 전망

✓ (영향권) 대전 수위, 세종 중심성 큰 폭 상승하여 대등한 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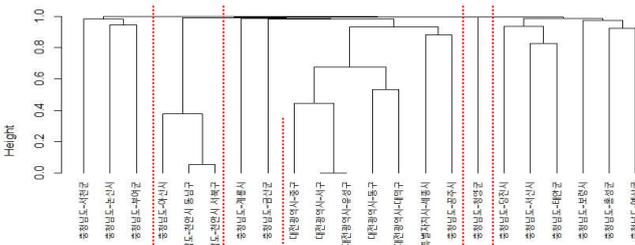
- (해석) 시·군간 통행량이 많을수록 연계성이 높아 계층화된 군집화 되는 특징
- 세종 영향권 확대로 대전중심에서 논산, 계룡, 천안 등으로 분산
- **[대전-세종(공주)-청주-천안] ~ [아산-당진] / [예산-홍성] 확대**
- 공주 : 대전시 - 세종시 군집 형성 전망
- 논산, 계룡, 금산 : 대전시 군집 연결 ~ 외부와 연결 전망
- 부여 : 대전시-논산시와 군집 강화 전망
- 청양 : 세종시 / 내포신도시와 경합 전망



동군·동학 위계 중심성 전망(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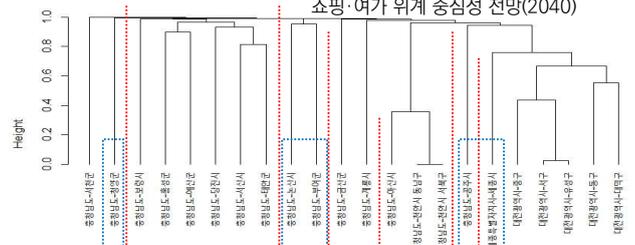


쇼핑·여가 위계 중심성 전망(2040)



충남, 대전, 세종 지역의 동군·동학권 멘드로그램(2020년)

주1) 충남 권역은 천안(천안시, 아산시, 홍성, 예산(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서산시, 대안군, 당진시) 등으로 구분함
 주2) 동군·동학권은 PA 기반 통행량적중 가중치 기준함. 가중치 분포하고, 가중치 분포함(통행량) 합산함
 주3) 시·군 내부통행량은 제외
 주4) 위계중심성은 보, 나, 지 위계중심성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결중심성, 근접주위성과 연결된 도시 중심성의 영향을 함께 고려
 자료: KTD, 대전·세종·충청권 PA 목적 통행량(2010년) 자료 / 최수민(2022), 통행량 자료를 이용한 충청권 도시 중심성 변화 분석, 충남연구통권제호



충남, 대전, 세종 지역의 동군·동학권 멘드로그램(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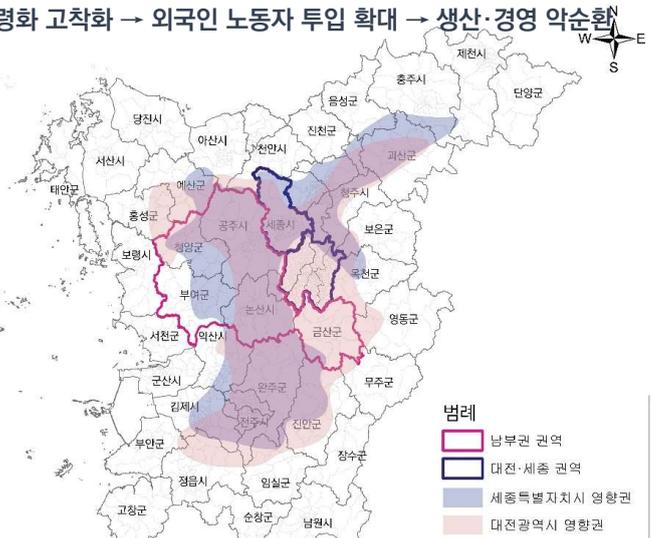
4

4.3 대전시, 세종시 영향권 전망

✓ 대전시·세종시 영향권은 충남(내포신도시), 충북(괴산), 전북(전주)까지 지속적인 세력권 확대 전망

- 대전시·세종시 연결 시군(공주, 논산, 계룡, 금산)은 대전시·세종시 영향권에 완전히 포섭 (부의 효과) 증고차 서비스업 위기, 역외 소비 확대로 인한 역외 유출 증가 우려
- 간선 교통량 증가 → 직주 분리(출퇴근형 제조업, 농업) → 시군청소재지 도소매업 쇠퇴 → 도심기능 유출·공동화
- 인구 이동 가속화 → 청년층 유입 제약 → 고령화 고착화 →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 생산·경영 악순환

- 청양군, 부여군은 제2차 영향권으로 내부 공간분화되어 공간 통합성 하락 전망
- 청양군 : 청양읍 / 정산면
- 부여군 : 부여읍 / 홍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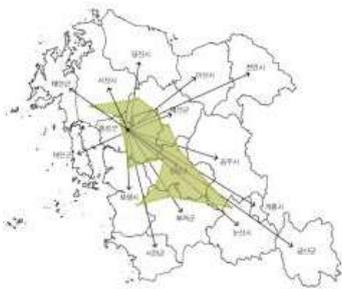
대전, 세종 영향권(2040) 전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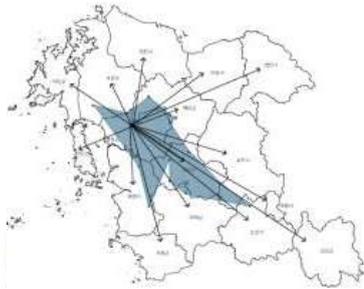
〈참고〉 내포신도시 영향권 전망

✓ **지속적인 영향권 확대 : 청양군 포섭, 공주시, 부여군 일부 포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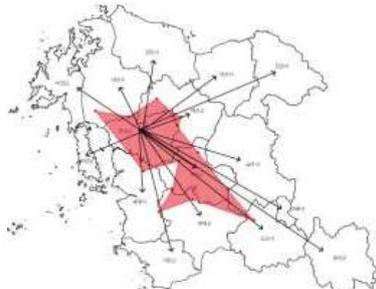
- 내포신도시 북측의 서산, 당진시와 규모가 유사하거나 큰 북측으로는 영향권 확대 어려움
- 내포신도시 영향권은 남동 방향(청양-공주방향)으로 영향권 확대 전망
- 만약, 내포신도시가 현재 목표인구를 확대 조성시에는 보령시도 포섭 가능
- 남부권 중 청양군은 내포신도시, 세종시 영향권간 충돌 가능성 높음



〈 2022 내포신도시 영향권 〉



〈 2030 내포신도시 영향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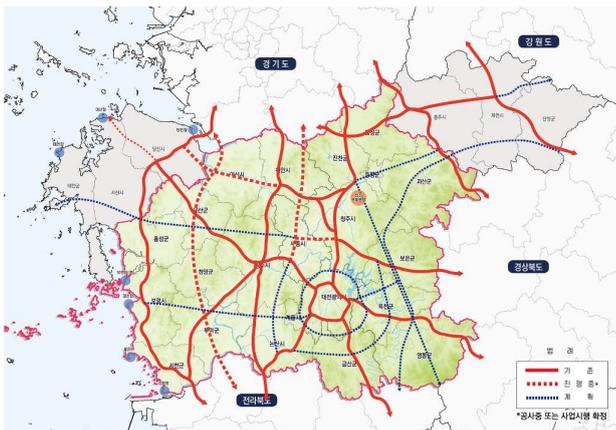
〈 2040 내포신도시 영향권 〉

4

4.5 교통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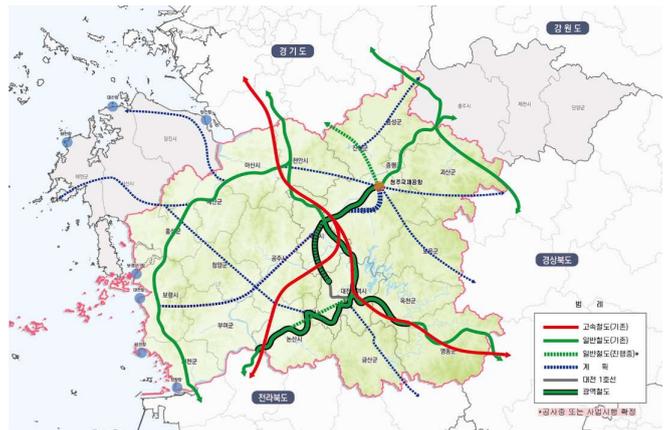
✓ **전 지역 균형있는 접근성 확보, 국가간선교통망 연계성 강화 + 초광역, 미연결구간 철도 연결**

- (대전시 환상형 도로) 세종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결하여 충남내 공간통합성 증진 전망
- (서울-세종고속도로 연장) 세종-논산을 연장하여 호남고속도로지선과 연결
- (광역철도) 대전-계룡-논산 연결하여 출퇴근 노선으로 확대
- (철도 결절점)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광역 도로망(고속도로)(2040)

자료 : 행복청(2022),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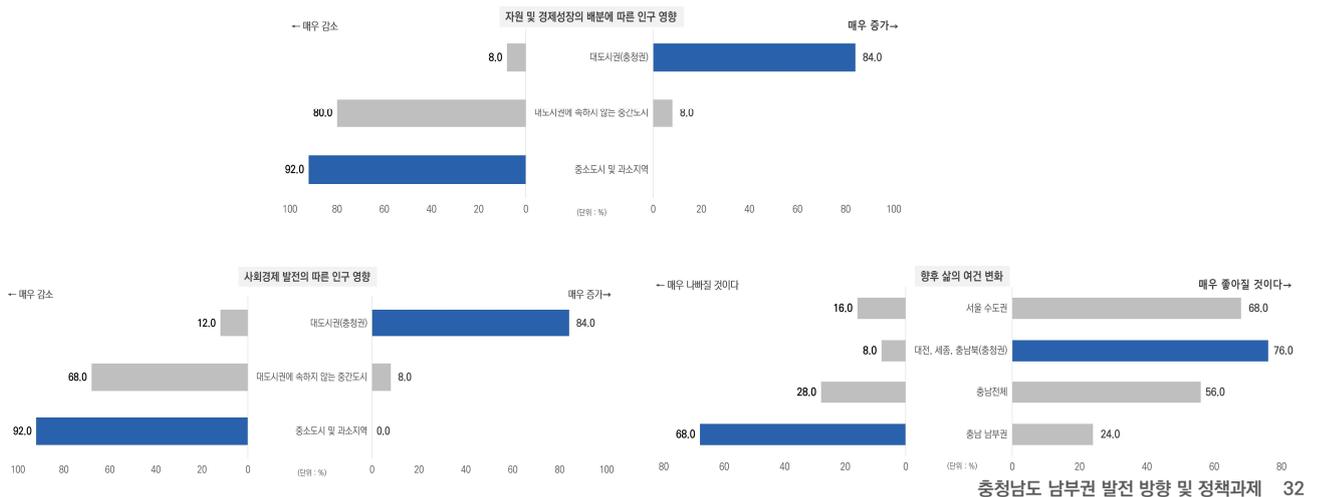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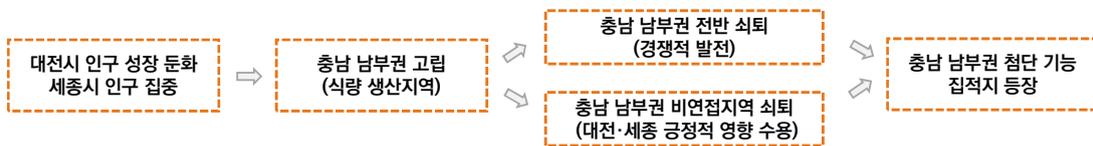


광역 철도망(2040)

5. 인식 조사(전문가, 주민)

5 5.1 남부권 미래 전망

✓ (영향 예측) 대전시, 청주시, 세종시, 천안·아산시 등 메가시티 발전경로상 남부권은 고립·쇠퇴를 경험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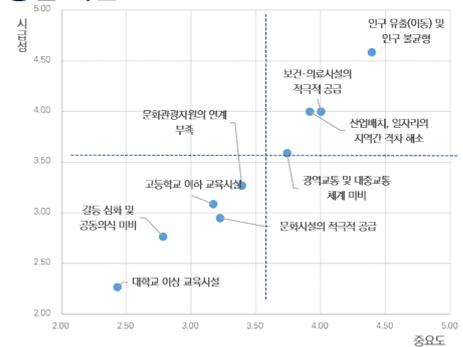


5

5.2 남부권 과제(중요도-시급도, 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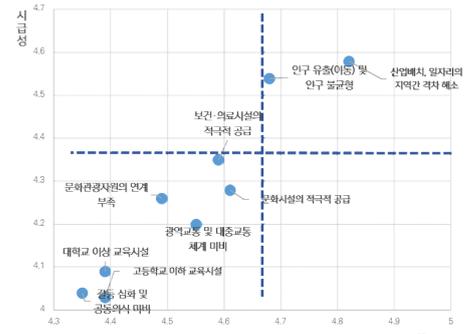
✓ [전문가] 인구 유출, 보건·의료시설 공급, 산업·일자리 격차 해소 중점 개선

구분	중요도	시급성
① 인구 유출(이동) 및 인구 불균형	4.39	4.59
② 산업배치,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 해소	3.91	4.00
③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부족	3.39	3.27
④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체계 미비	3.74	3.59
⑤ 보건·의료시설의 적극적 공급	4.00	4.00
⑥ 문화시설의 적극적 공급	3.22	2.95
⑦ 고등학교 이하 교육시설	3.17	3.09
⑧ 대학교 이상 교육시설	2.43	2.27
⑨ 갈등 심화 및 공동의식 미비	2.78	2.77



✓ [주민] 산업·일자리 격차 해소, 인구 유출 중점 개선

구분	중요도	시급성
① 인구 유출(이동) 및 인구 불균형	4.68	4.54
② 산업배치,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 해소	4.82	4.58
③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부족	4.49	4.26
④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체계 미비	4.55	4.20
⑤ 보건·의료시설의 적극적 공급	4.59	4.35
⑥ 문화시설의 적극적 공급	4.61	4.28
⑦ 고등학교 이하 교육시설	4.39	4.03
⑧ 대학교 이상 교육시설	4.39	4.09
⑨ 갈등 심화 및 공동의식 미비	4.35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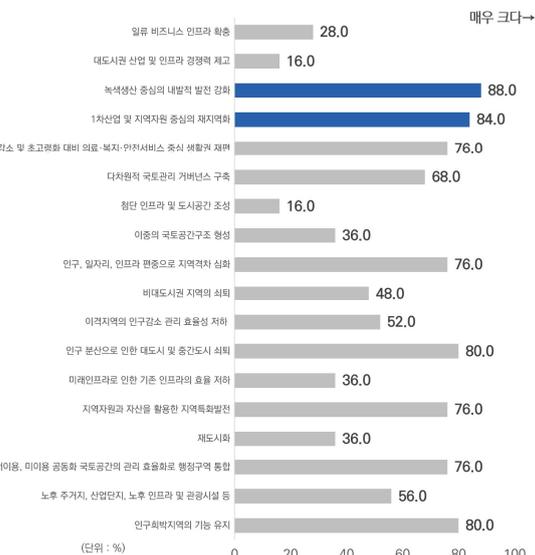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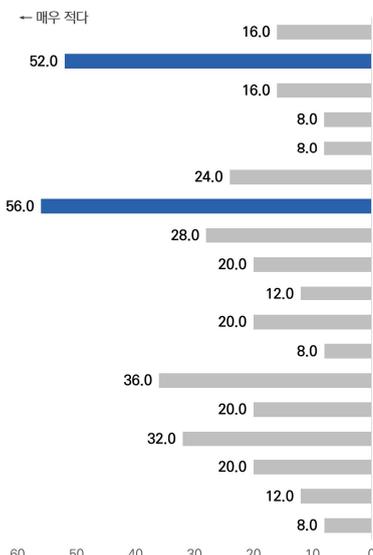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33

5

5.3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인구 영향(전문가)

✓ [영향력 큼] 녹색 중심 내발적발전강화, 1차산업 재지역화, 도시 쇠퇴, 인구희박지역, 지역격차심화, 특화발전

✓ [영향력 적음] 대도시권 산업경쟁력, 첨단 인프라·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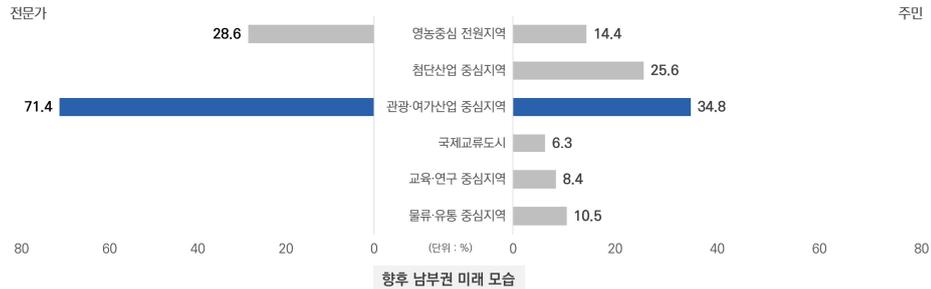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 영향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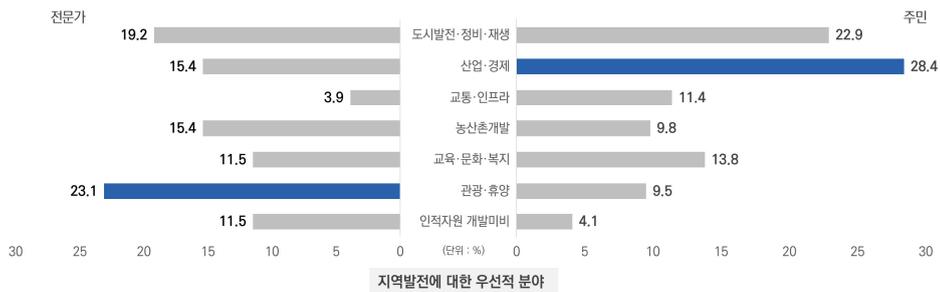
5

5.4 남부권 발전 방향

✓ [미래 모습] (전문가) 관광·여가산업중심지역 절대적 + 영농중심 전원지역 / (주민) + 첨단산업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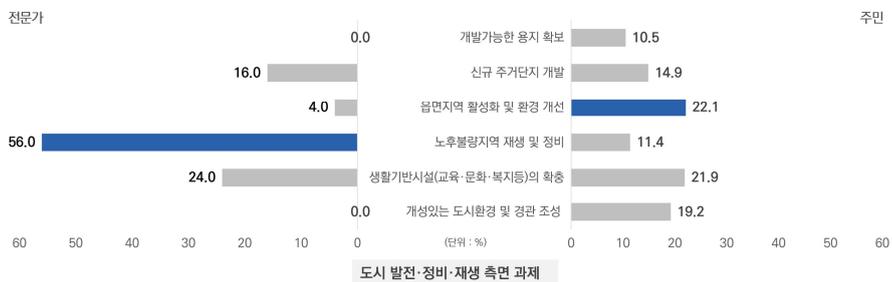
✓ [발전 분야] (전문가) 관광·휴양 > 도시정비 > 산업·경제, 농산촌개발 순 / (주민) 산업·경제 > 도시정비 순



5

5.5 부문별 주요 과제

✓ [도시] (전문가) 노후불량지역 재생 > 생활기반 확충 순 / (주민) 읍면활성화, 생활기반 확충 > 도시환경·경관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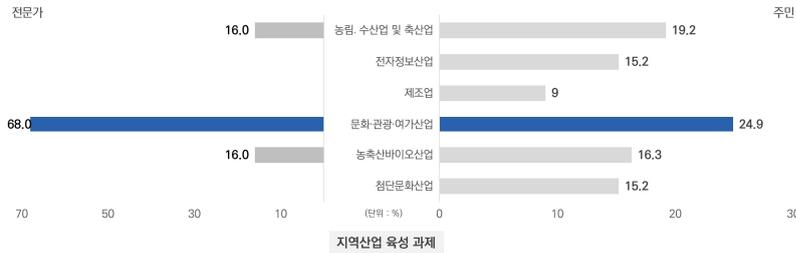
✓ [교통·인프라] (전문가) 대중교통망 확충 > 대도시 접근성(도로, 철도) 순 / (주민) 고속도로 확충 > 접근성 개선 순



5

5.5 부문별 주요 과제

✓ [지역산업] (전문가) 문화관광여가산업 >> 농림축산업, 농축산 바이오 순 / (주민) 전문가와 동일(응답률만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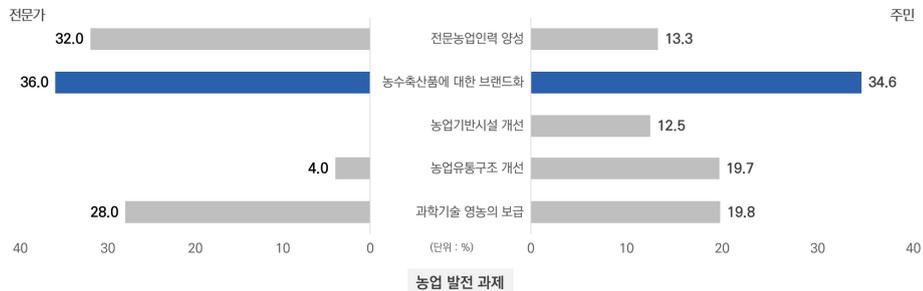
✓ [소득] (전문가) 지역특화산업 >> 기업유치 순 / (주민) 교육문화환경 > 지역특화산업 > 인적자원 육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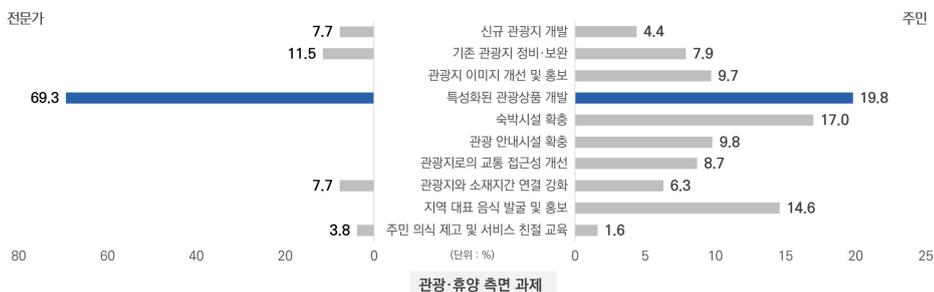
5

5.5 부문별 주요 과제

✓ [농업] (전문가) 브랜드화 >전문 농업인력> 과학기술 영농 순 / (주민) 브랜드 >> 과학기술 영농, 농업유통구조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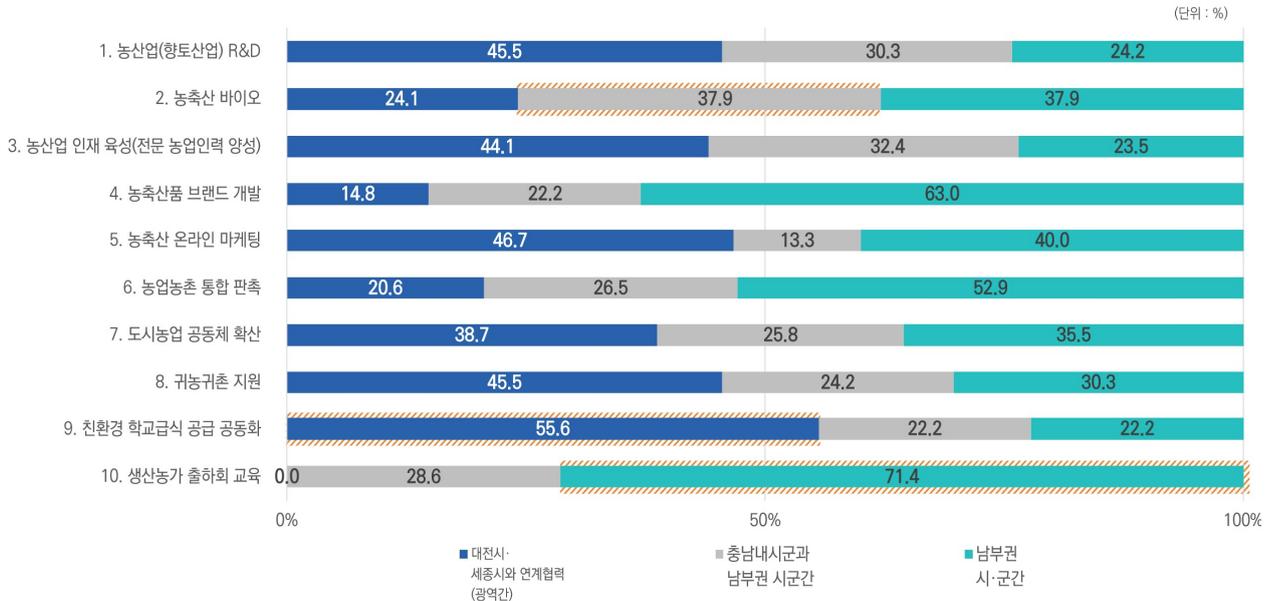
✓ [관광] (전문가) 관광상품 >>> 관광지 정비·개발·연결 순 / (주민) 관광상품 > 숙박시설 > 대표음식 순



5

5.6 지역간 연계협력 분야(농산업)

✓ [농산업] (대전·세종) 과학기술, 인재양성, 학교급식 ↔ (남부권내 시군간) 브랜드, 통합 판촉, 농가 출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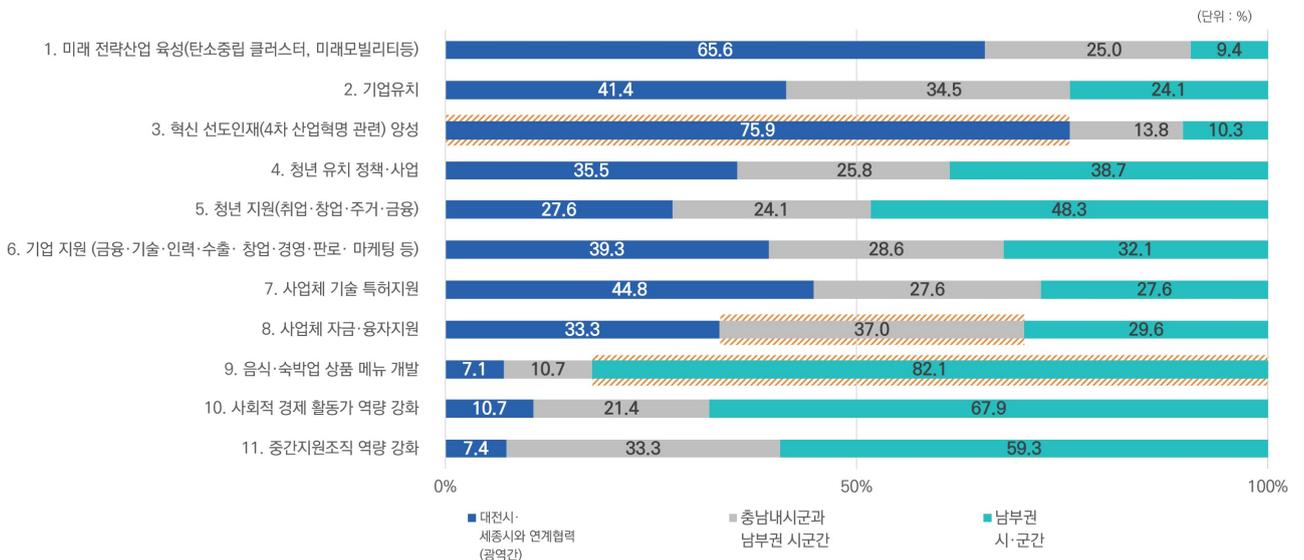


5

5.6 지역간 연계협력 분야(산업·경제)

✓ [산업·경제] (대전·세종)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사업체 기술지원

↔ (남부권내 시군간) 음식·숙박상품개발, 사회적 경제활동가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청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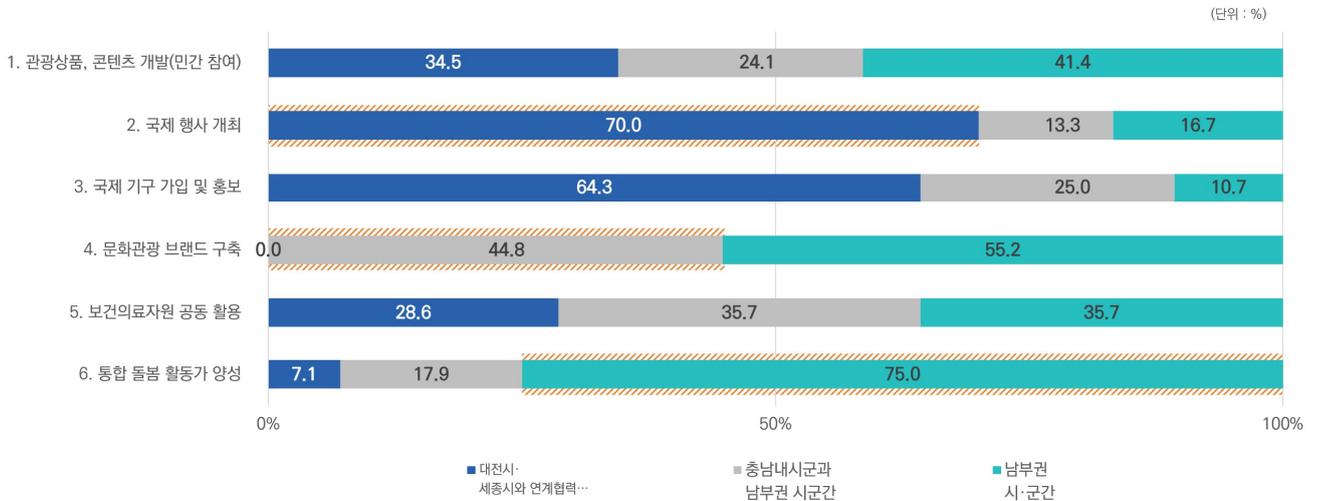


5

5.6 지역간 연계협력 분야(관광·복지)

✓ [관광·복지] (대전·세종) 국제행사, 국제기구 가입·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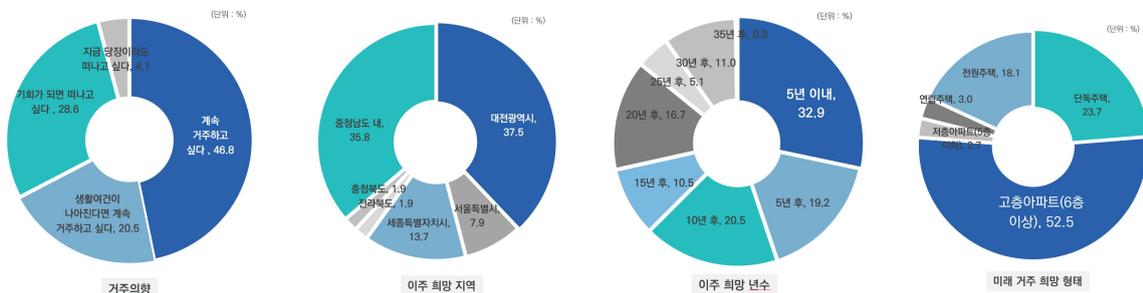
↔ (남부권내 시군간) 통합 돌봄 활동가 양성, 문화관광 브랜드, 관광상품·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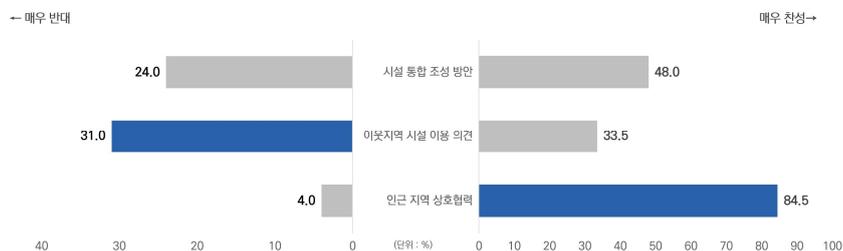
5

5.5 주민 정주 의식

✓ [이주 의사] 10년 내에 대전시로 48%가 이주 희망(생활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하며, 아파트 거주 희망



✓ [연계협력] 인근 지역 상호 협력 매우 찬성(84.5%) >>> 시설 통합 조성 찬성(48.0%)



5

5.5 주민 정주 의식

☑ [구매·이용권] 저증고차 서비스 모두 지역내 구매·이용은 감소 의사, 대전시 이용 의향 절대적 우위



6. 남부권 발전 방향 및 과제

6

6.1 기본방향

국가정책상 도시권 중심(충청권 메가 시티 등)정책은 지속 추진 전망

대도시 영향을 흡수하고,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수동적 형태로는 한계
(낙후지역, 생산지역 전략)

도시간 수평적 연계, 쌍방향적 흐름을 통해 혁신시 시너지 효과 기대



지역사회, 문화의 폐쇄적 한계 극복,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 노력
도시간 특화된 기능을 갖고, 상호 보완적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지역사회로의 전환

광역차원

생활 환경,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
도시간 연계·협력
경제주체간 상호 작용 극대화

지역차원

교통 연계성 제고 및 도시구조 개선
지식·사람 기반 비물적 인프라 강화
시설보다는 콘텐츠 중심으로 정책 전환

6

6.2 도시·교통 부문 정책과제

1. 생활권별 계획적 관리체계 마련

✓ 주요 중심지별 생활권 계획 구체화 및 거점공간 조성 / 기회발전특구+교육특구 융합된 생태계 기반 마련

- 장래 인구, 교통, 관광지, 산업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생활권 조성
- 수위 중심지 거점성 확보 및 면지역간 교통 접근성 체계화
- 노후 산업단지·농공단지, 관광지를 새로운 생산·일자리 거점공간으로 재편
- 창업지원, 교류·교류협력 등 혁신 공간 조성

대전시, 세종시 연계
남부권 생활권 계획
(기존 계획(광역도시계획, 시군
기본계획, 농촌공간계획 등 통합)

✓ 외연적 확장을 관리하고, 분산된 공공시설을 집단화 유도

- 대전시·세종시 영향을 흡수하는 대도시 근교형 도심기능 콤팩트화
- 도시기능 입지 유도를 위한 정책적, 계획적 대안 마련
- 과도한 상업지역 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공간적 압축 유도 방안 마련

시군별 용도지역, 지구,
산업입지, 입지유도 계획
종합화
(시군별 관리계획 지침 하달)

※ 만연한 공공사업의 도심 외부 입지는 지양

6

6.2 도시·교통 부문 정책과제

2. 다양한 소규모 주택(단지) 및 인재 혁신 개발

✓ 청장년층 전원생활 모색형 미니 신도시·복합단지 개발

- 대전시 고차 도시 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자연경관 향유층을 고려
- 문화, 복지, 보건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전원 복합단지 조성
-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워케이션형 공간·시설 조성

공주, 논산, 금산
경관우수지역내
워케이션형·통합서비스형
복합단지 조성

✓ 대학·학교, 관광지, 산업단지를 주요거점지와 연계한 인재 혁신 복합단지 조성

- 대학 졸업자의 지역내 착근성 제고 - 초중고, 대학교와의 교류 협력
- 지역내 젊은 문화 인재의 교육 생산 능력 제고 및 규제 완화
 - ※ 진천 국제문화특구, 동래 교육문화특구, 성동구 글로벌인재육성교육특구, 보성 영어·평생교육 특구 등
- 직주 분리(근무지, 거주지 불일치)로 발생하는 외국인노동자, 근로자 역량 강화
- 제도권내 학교 외의 대안학교 조성하고, 학비, 운영비 지원
 - ※ "대안학교=귀족학교" 라는 오명 개선 / 발도르프학교, 슈타이너 학교 등

공주, 논산, 금산, 청양 캠퍼스
개방 및
지역사회 연계 LAB 조성
(교육특구 대응)

6

6.2 도시·교통 부문 정책과제

3. 공공주도형 자율적 도시재생 확대

✓ 도시재생 + 재건축, 재개발 복합 추진(공공형 > 민간형)

- 현재의 도시재생의 한계점 극복한 재건축, 재개발의 유연적 대응(공공성 강화)
-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
- 도시 내부 빈민, 사회적 약자의 포괄적 수용

LH, 충남개발공사
참여 확대

✓ 거주비용 최소화를 위한 기본 복지형 주택 조성

- 도심 내부 스마트 그리드 대응 주민 지분참여형 에너지 충전 스테이션 조성
 - ※ 한국에너지공단 지분참여형 신재생에너지센터 확대 및 지자체 보조
- 주택 임대료 지출 감소,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의 신탁형 주택 보급(1인가구 소형집합주거, 기성주거지 공간관리 등 종합적 대안)
 - ※ 어포터블 하우스(Affordable housing) 저소득층 가족, 노인, 장애인을 위한 낮은 월세의 민간 소유주택으로 공공프로그램 지원
 - 소득별로 입주자 기준 마련하고, 낮은 월세의 임대주택을 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관리하는 데에 지원
 - 미국 매사추세츠주 임대주택 세금공제 프로그램(LIHTC: low Income Home Tax Credit Program) 등 다양

주택 전담부서 신설 및 기능
강화
(필요시 남부출장소 기능 강화)

6

6.2 도시·교통 부문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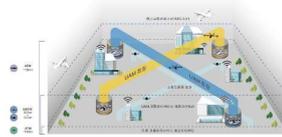
4. 교통 인프라 연계 광역교통체계 운영

✓ 대전시, 세종시 BRT 및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 세종-공주BRT, 세종-계룡BRT
- 지역 거점교통시설 조성(계룡역 환승센터)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통신 인프라, 영상촬영장치 등 도로 인프라 디지털화
 -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도로(미국 미시간주 카뷰뉴)

✓ 철도 도로망 등 교통시설 입체화 및 기반시설 정비

-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특화단지 조성
- 철도역사 중심 창업거점(혁신공간) 조성 및 창업생태계 구현
 - ※ 충남 소방산업 특화단지,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연계
-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 체계 구축, 수직 이착륙장 등 미래 교통망 대응



(좌) 미국 NASA 중장기 항공교통 비전(AAM, Advanced Air Mobility)
(우)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개념, 국토교통부

국가, 광역, 간선 등 다중
교통망의 도심내 입지 및
개발 촉진

6

6.3 산업·경제부문 정책과제

1. 산업집적지 형성 및 연계협력(장기)

✓ 남부권내 인력 시장 보완 및 공급

- 근로자 수용태세 확보로 직주분리 종합 대응
- 농업 등 계절 노동자의 수급 및 인력시장 조달(대전, 세종 사회적 약자 교육 훈련 및 공급)
- 기업,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 노동 숙련도 고도화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주거지 공급

남부권 인력시장 공급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특성화

✓ 남부권 주력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한 광역간 연계 협력(시군간 무한 경쟁 지양 /시군간 역할 분담)

- 공주시 : 천안·공주 산업벨트 조성, R&D 창업공간 조성, 첨단 소재 산업, 바이오 소재산업, ICT 융합산업, 에너지 관련산업 육성
- 논산시, 계룡시 : 국방산업 클러스터 품질, 서비스 고도화 및 기업 유치
- 부여군, 청양군 : 농업, 산림 바이오 소재산업, 식품가공 산업, 유통·물류산업 집적화 및 세종 바이오 메디컬산업 연계
- 금산군 : 인삼약초산업, 소공인 기업지원 특화

시군별 전략산업 선정 및
광역간·지역간 연계협력

6

〈참고〉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차별성

구분	국가경제	지역경제
목적	경제현상에 대한 거시적 진단과 대응	지역산업 및 경제현장의 실질적 문제와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
목표	장기적이고 생산과 수요 및 산업개편 등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	단기적 현안적 문제해결과 지역주민 및 지방기업의 체감형 정책대안 마련
	새로운 산업의 육성	기존산업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진 등 지역주민과 기업의 체감형 정책 추진
공간	비공간적 생산 확대와 생산성 향상	지역내 생산연계와 지역화 및 지역내 소비 진작 및 생산-소비의 순환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대응	융합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R&D,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의 육성	첨단정보기술의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용과 활용방안
기업	투자의 효율성과 국가의 산업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기술혁신과 생산 확대에 집중	주민의 취업 및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영세상공업의 생산성 향상과 활성화에 집중
대상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와 공급 및 금융정책 등 산업과 경제 활성화	농업, 상업, 제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한 재정 및 행정 지원과 입지여건 개선
효과	총량적 생산과 투자의 확대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경제정책 촉진사업)
우위성	육성산업과 기술의 국제적 상대 우위성 선점	지역의 자원, 입지, 우위성을 중시

자료: 김용웅(2018), 지역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저자재정의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51

6

6.3 산업·경제부문 정책과제

2. 4차 산업 혁명을 수용한 기존 지역경제 구조·체질 개선

✓ 농축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산업별 생산성 향상

- 농축어업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촉진(스마트 팜)
- 전통시장 및 도소매 분야 디지털화 촉진
- 중소제조업분야의 자동화 촉진
- 산업별 협력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화 촉진
-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지역화폐 및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 삶의 질 분야 스마트 기술 보급 및 사회적 경제 인력 양성

- 주택, 건축물 재생에너지 기술보급 확대
- 스마트 홈, 건물, 생활 분야 스마트 기술 활용 확대
- 도시 인프라, 서비스 행정관리 디지털·자동화

시군별 지역경제 현행화
4차산업 혁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청년층 일자리 유입 확대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52

6

6.3 산업·경제부문 정책과제

2. 4차 산업 혁명을 수용한 기존 지역경제 구조·체질 개선

✓ 노동집약 루틴화 산업 구조 조정 및 산업 전환

- 노동집약 쇠퇴산업 구조조정과 산업 전환 지원
- 쇠퇴산업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및 지원

✓ 취업 구조 변화 및 재훈련

- 하드 스킬 위주 일자리 감소 대응 산업인력 재훈련
- 산학협력 창의적 인력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 일자리 부족·전환시대 종합 대응

- 미래형 일자리 창출 : 고령화와 생활스타일 변화 관련 신규 일자리,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및 사회적 기술, 복합문제 해결 전문인력 양성
- 무임 일자리의 상품화 / job Sharing

시군별 지역경제 현행화
4차산업 혁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청년층 일자리 유입 확대

6

6.3 산업·경제부문 정책과제

3.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비즈니스화 확대

✓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체계 및 진입장벽 해소 원스톱 서비스

- 생계, 농업 교육 훈련
- 귀농자 자본투자 지원, 인턴 급여, 직접 지불제 확대
- 농지 임대, 경영이양체계화
- 농지 유동화 연동 농지은행의 청년 농업인 연계기능 강화

✓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 농식품산업 활성화

- 식품 생산, 유통, 소비자 니즈, 식문화 확대 위한 빅데이터 구축
- 식품 평가, 정보 공유 시스템
- 전통식품에서 일반가공식품 정책 강화
- 식재료 사용 활성화, 식품 포장 및 기자재 외연 확대
- 농가판로 확보 및 역량 개발
- 취약계층 대상 농업기술 및 경영 역량 강화
- 대도시 농수산물 시장, 수출 대상 국가별 맞춤형 지원, 외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학교급식, 공공기관 납품 식자재의 공동 출하 및 판로 확보

✓ 농산업 미래 성장 산업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R&D 추진 및 스마트 팜 확대

- 농업기술 전문가, 기술 네트워크 구축
- 빅데이터 인력 양성 및 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연구원 연계 협력

남부권 농산물 전담하는
조직체 설립 운영
(시군간, 광역간, 기업-
농민간 공동 수익창출 모델)

6

6.4 문화·관광부문 정책과제

1. 관광 서비스업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적응 태세 마련

✓ 지역 청년, 주민, 관광 종사자 참여 인적 플랫폼 구축

- 창의적 사업 기획, 서비스 품질 관리, 교육·훈련, 마케팅, 상품개발 플랫폼 구축
- 지역단위 관광발전 혁신주체(지역관광기획가 등) 양성
- 관광창업 활성화 지원, 산·관·학 협력사업 발굴 지원

관광시설 지양
서비스, 콘텐츠 중심으로
획기적인 질적 개선

✓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

- 전통 관광영역 : 숙박, 항공, 식음료, 여행사, 관광
- 융복합 관광영역 : 엔터테인먼트, 문화 콘텐츠, 의료, MICE, 문화예술, 스포츠, ICT, 제조업 등

✓ 기존 관광 한계 극복한 새로운 관광시장 육성

- 지역사회 중심 관광 :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관광사업 모델
-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하는 도시 관광 : 수요창출 전략 다양하고, 도시이미지 창출, 마케팅에 효과적
-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소도시·시골 관광 : 정감있고, 낭만적인 소소한 재미 만끽 관광

주민, 민간 주도형
혁신생태계 육성 및
차별화된 관광시장 육성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55

6

6.4 문화·관광부문 정책과제

2. 관광분야 연계 개발 및 공동 마케팅

✓ 공공중심의 다지역간 관광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 홍보·마케팅

- 광역관광코스 발굴 및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판매
- 소도시 자원 연계 네트워크 관광상품 개발(마을 만들기 연계)

✓ 테마별 광역관광 주유 루트 형성 및 촉진

- 테마성, 스토리성 있는 관광지역 네트워크화
- 기존 백제문화, 종교문화, 정신문화, 유교문화, 불교문화 등 콘텐츠 중심의 연계성 강화
- 대전시·세종시, 충청남도 홍보·마케팅
- 각 테마별 해외 조직, 기관, NGO단체, 관광단체간의 협약 체결 및 마케팅

테마별, 스토리별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및
대전, 세종, 충남 공동 마케팅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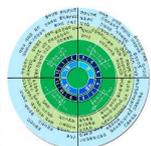
6

6.4 문화·관광부문 정책과제

3. 음식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차별화된 음식문화 형성

✓ 맛, 음식, 식문화가 관광과 접목된 음식문화 개발

- 최근 여행목적지 변화 : 이동거리, 경비 미고려 / 국내 여행 1인 평균 지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이 음식 관련 지출
- 먹는 즐거움으로서 음식에 대한 원형 보전 및 발전
- 젊은이의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눈·맛·눈높이에 부합하는 음식개발 및 지적재산화
 - 음식 레시피 개발 및 지적재산화(남부권 공동) / 전문 음식점 육성을 위한 지적재산권 무료 활용
- 특산물 활용 치유음식 개발 및 인적자원 육성, 외식 상품 개발
 - ※ 전주시 :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 대구시 : 미식분야 관광전문가 양성 “잇 히어로”
 - 전남 신안군 : 맛의 예술섬 조성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음식문화 확대 및 지적 재산화·활용

4. 광역·지역간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DMO 운영

- 상품주기 빠름 특성을 고려한 관광 정책 종합 지원 조직

구분	주요기능	주요내용
관광사업기획/계획	계획수립/사업기획	· 관광진흥계획 수립, 행정의 계획수립 지원 · 관광사업의 기획, 행정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
	관광관련 조사연구	· 지역 관광관련 조사연구
	지역 관광사업평가	· 목표(KPI)설정 및 성과관리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데이터수집	· 중장기 시장 상황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주요 관광사업 현황 분석
	마케팅전략수립	· 주요 관광사업 환경적 실제, 관광개발에 연계도조사
	국내홍보 및 프로모션	· 지역관광 마케팅 실행 등
관광자원 관리	국외홍보 및 관광객유치	· 국외 관광 마케팅 지원, 설명(국외인물유치(홍투어)) · 국외 관광 마케팅 참여 설명(ATO, ZTO(글로벌관광))
	관광자원 및 관광지관리	· 지역관광 자원 및 관광지 관리
	관광상품 및 콘텐츠개발/관리	· 역사관광을 위한 콘텐츠 조성, 남북프로젝트, 관광패스, 역사관광 연계 관광상품 개발, 여행 상품개발(관광패스 등)
관광산업 지원	축제지원 및 운영	· 지역축제 지원, 여행상품 및 관광상품 등 지원가능 · 지역축제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관광비즈니스 창업/육성지원	· 관광패스 조성 및 정보 제공 · 마을관광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관광품질 관리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 관광패스, 관광상품 운영(관광기행도, 방문, 세부, 피드백) 등 · 지역 관광상품(관광패스) 품질관리 지원
	관광안내서비스 등	· 숙박(음식)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지역 대응강화 · 한국관광품질인증 취득지원, 빅데이터(관광패스)활용

관광사업 전체 대전시, 세종시 연계협력력을 총괄하는 남부권 DMO운영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57

6

6.5 연계·협력부문 정책과제

- ✓ (문제 인식)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보다는 생산적 협력이 중요 + 공통의 이해관계 합의된 사업 중심 + 경쟁요인 제거 및 성과 공유, 조정기능 강화 필수
- ✓ (관계인구) 농촌 재생 측면의 도농상생협력
 -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광역간)
 - 농산촌형 스마트 워크 기업 활동 지원(시군간, 광역간)
 -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민과 현장 매개하는 재능은행(광역간, 시군간 연계)
- ✓ (기반시설 운영)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으로 시작하여 연계협력 영역 확대
- ✓ (중간지원 조직)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 및 네트워킹 강화·고도화(광역간, 지역간)
 - 중앙정부 부처별 중간지원조직 통합화 유도(관료형 중간지원조직 탈피, 시군 공무원 인식 개선 필요)
 - 시군 활동가, 코디네이터 양성 / 인적역량고도화·전문화 및 네트워크 인력 양성
- ✓ (인적 자원) 인적자원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연동
 - 산학연 네트워크 : 고도의 기술 교육, 농산업 클러스터, 지역전략식품산업 양성 등
 - 소상공인 : 자영업 경영진단, 창업 컨설팅, 현장 체험 멘토링, 자영업 클리닉, 시설개선 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자영업 협업화, 골목 창업학교, 농수산물 가격정보, 물가정보, 소상공인 물가정보, 도매시장 정보, 착한가격 업소 정보 등
 - 창의 인재 : 농어촌 유학, 농어촌 체험교과과정, 초중학교 공동급식사업, 관계인구 유치, 부동산·세제관련 인력 양성 등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58

6

6.6 실행 방안

✓ (제도) 유사·동종사업의 통합추진하고 민간주도 추진체계 지원을 위한 규제 혁파

- 산업·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육성지원 + 도시계획, 토지이용 + 규제완화 + 혁신 동반
- 민간주도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초연결, 초지능, 디지털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 토지이용, 건축법규 등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제도 개혁 추진

✓ (책임성 강화) 성과 창출 중심, 약속 이행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예, 남부권 투자 협약제)

- 남부권에서 추진하는 중앙-충남도-시군 사업의 로드맵 마련 및 사업 추진 책임성 강화
- 자율성, 전략성, 구체성 원칙하에 중앙-충남도-시군간 성과창출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상황 점검

✓ (추진체계) 산·학·민간 중심 - 행정은 지원 중심, 다분야 통합적 추진 필요 / 남부출장소 역할 강화(제안)

- 남부권 사업 관련 민간 중심의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조직을 남부출장소(균형발전정책과)로 이관하여 역할 강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민간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평가 시행

6

6.6 실행 방안

✓ (계획, 자원) 국가-충남도-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원화 및 가용 재원의 효율화

- 중앙-충남도-시군의 산발적 추진은 정책효과가 미흡
- 계획단계별, 각종 법정계획간의 전략적 연계성 없는 산발적 추진은 중복과 낭비, 정책 사각지대 발생
- 국가-충남도-시군 계획의 일체화 및 가용재원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역할 전환)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

- 제2단계 제2기부터는 사업 유형 다양화(전략산업 + 연계협력사업 + 시군 자율사업)하고, 시군자율사업비 규모 대폭 축소
- 사업타당성 확보 및 사업 규모는 중앙투자심사 이상 규모로 투자 / 사업 발굴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 대전시, 세종시와 연계협력 + 시군간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조직 및 로드맵 마련
- 남부권은 고급 인적자원의 자체 육성, 공급에 한계

✓ (시군 행정 역량) 시군 역할을 관리형에서 정책 코디네이터형으로 전환

- 시군의 행정 역량은 시설사업 대비 산업, 경제, 인구 등의 분야는 역량이 매우 미흡
- 미래 기획·계획 능력 제고, 실현 수단의 종합적 조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

감사합니다

제1차 핵심정책 릴레이 워크숍

남부권 발전방안과
충남 균형발전의 과제와 방향

발제 2

성장촉진지역 지원제도 현황 및 추진 방향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성장촉진지역 지원제도 현황 및 추진방향

2023. 01. 26.

장은교 연구위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KRIHS 국토연구원

Contents

Ⅰ	성장촉진지역 현황	03
Ⅱ	성장촉진지역 지원 체계	07
Ⅲ	성장촉진지역 운영 효과	27
Ⅳ	성장촉진지역 추진방향	35
Ⅴ	충남도 성장촉진지역 추진 제언	43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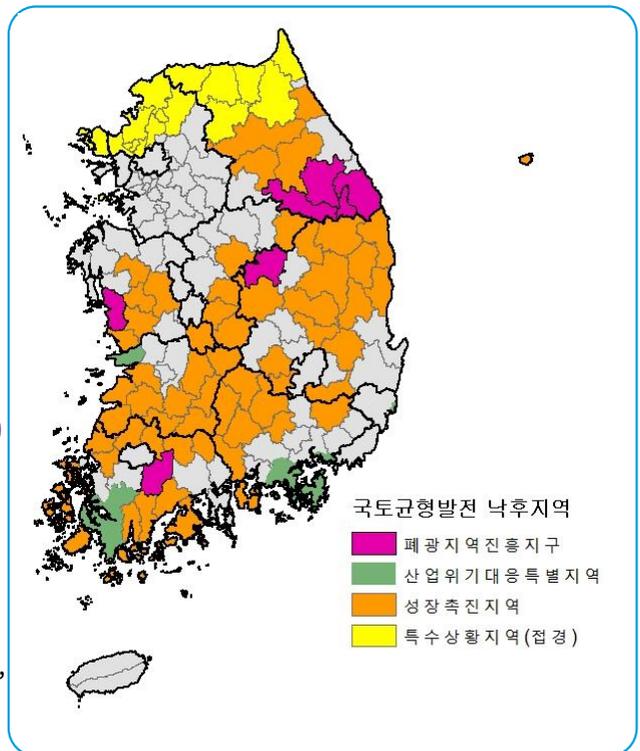
성장촉진지역 현황

1.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공간설정 • 04
2.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 • 05
3.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표 • 06

01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공간설정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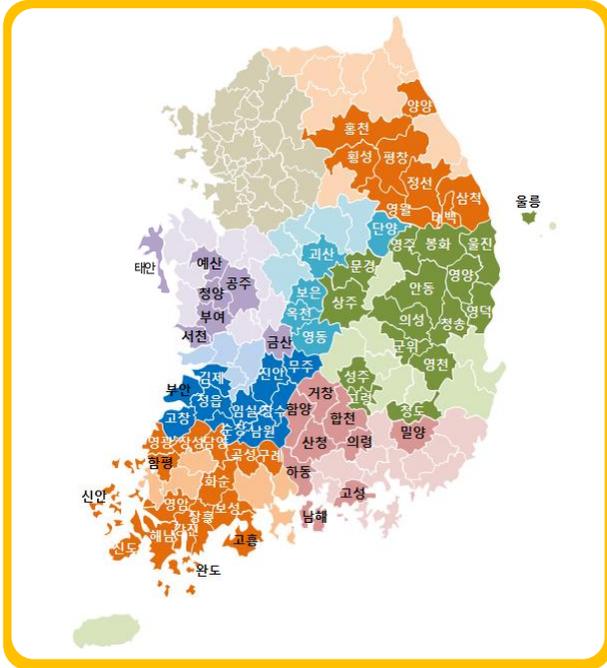
- ◎ **접경지역(특수상황지역)_행안부(균특법, 접경지역 특별법)**
 - 특수상황지역은 15개 접경 시군 및 186개 개발대상도서(성축 제외)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2011~2030년, 20년), 변경 10년
- ◎ **성장촉진지역_국토부(균특법, 지역개발 및 지원법)**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대상
 - 시도별 지역개발계획 수립(10년)
 -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역수요 맞춤형사업 추진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_산업부(균특, 폐특)**
 - 급격한 산업침체로 도시 및 일자리 문제가 발생한 군산 등 9개 시군구
 - 폐광지역 보령, 화순, 문경, 정선, 영월, 태백, 삼척 7개 시군
 - 대체산업 육성(폐광),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 등
- ◎ **인구감소지역_행안부(균특법)**
 - 89개 시군구(대구, 부산 자치구 일부 포함, 접경지역 일부시군, 성축지역(70개 포함_이외 제천, 논산, 보령, 태안, 창녕, 함안)
 - 시·군 5개년 인구활력계획, 연간 150억 내외 재정지원



I 국가균형발전 현황

02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시·군
 -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평가하여 70개 성장촉진지역 지정(2009년, 2014년, 2019년 재지정_5년)
 - 낙후지역 중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22개소 지정(시·도지사 요청 → 국토부장관 승인_10년)
 - ※ 충남 태안군의 경우 성장촉진지역 제외(2019년), 지역활성화지역 존치
 - ※ 14년도 비교해서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북 예천, 경남 창녕 등 4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나고,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등 4개 시·군이 새롭게 편입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지정현황

구분	성장촉진지역(70)	지역활성화지역(22)
강원(8/2)	태백시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정선군	태백시, 양양군
충북(5/2)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
충남(6/2)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3)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전남(16/5)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곡성군, 고흥군, 함평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16/5)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경남(9/3)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의령군, 산청군, 합천군

자료: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지정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8.27.

1 경제·지역·환경
II 경제·지역·환경
III 경제·지역·환경
IV 경제·지역·환경
V 사회·경제·지역·환경
6

03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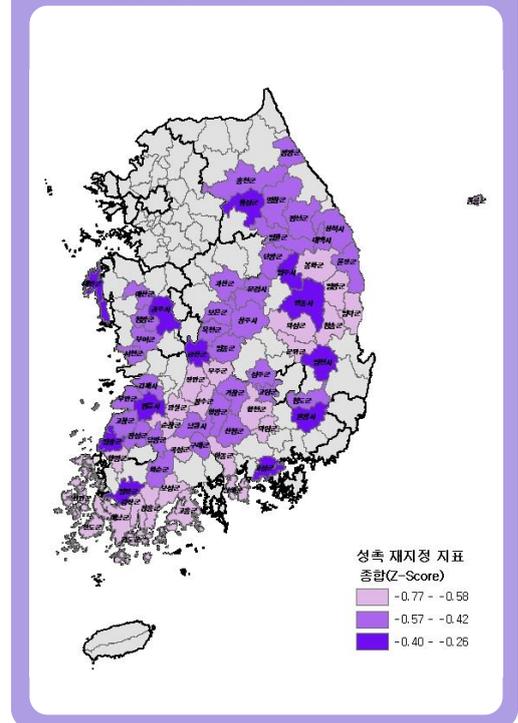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지표

- 4개 부문(인구, 소득, 재정, 접근성) 7개 세부지표 반영
 - 인구밀도, 연평균인구변화율(10개년), 지방소득세, GRDP(3개년), 재정력지수(3개년), 생활SOC+지역접근성
 - 70곳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22곳 지역활성화지역_태안군 성촉제외)

항목	지표	관련자원
인구	인구변화율	-귀농, 귀촌지원, 출산장려대책 등
	인구밀도	
재정	지역별 재정력지수	-법인세 감면, 고용지원금 지급 등
소득	지방소득세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기업체(공장포함) 유치
	지역별 GRDP	
지역접근성	지역 접근성	-문화체육시설확충, 진입도로 개선 등
	생활SOC접근성(11개) ·도서관, 복지관(사회/노인), 보건소, 문예회관, 전시실, 응급의료시설, 경기장, 수영장, 체육관, 공원	

자료: 국토교통부, 2019,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및 낙후지역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참고, 재작성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종합지표



1 경제·지역·환경
II 경제·지역·환경
III 경제·지역·환경
IV 경제·지역·환경
V 사회·경제·지역·환경
6



II 성장촉진지역 지원 체계

- 1. 성장촉진지역 지원제도 도입 배경 • 8
- 2. 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 10
- 3. 투자선도지구 추진현황 • 16
- 4. 지역수요맞춤형 사업 추진현황 • 20
- 5. 시도 낙후지역특별회계 운영 현황 • 22

01 | 성장촉진지역 지원제도 도입 배경

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년 제정) 낙후지역을 2009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
 - 성촉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촉 도서제외)
 - ※ 2017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2021년 인구감소지역 균특법 포함
- 기존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과다 지정, 추진절차 복잡, 종합적 연계 및 통합관리체계 미흡 등을 해소하고자,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통합법률체계 마련
 - 2014년 12월 기준 지역개발 사업은 1,896개(개발촉진지구 911개, 특정지역 330개, 지역종합개발지구 1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61개, 도서개발사업 593개), 완료사업은 705개로 37%정도임

중전 2개 법률 5개 사업구역을 통·폐합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6. 3) 및 시행(2015. 1. 1)



01 성장촉진지역 지원제도 도입 배경

2 지역개발계획 수립대상 유형구분

-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신발전지역, 특정지역 등)의 단편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기반 중장기(10년) 발전계획마련
 -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5), 발전촉진형(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거점육성형(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중핵개발지구) 구분

지역개발계획 상 유형구분

구분	발전촉진형 계획 수립 대상지역		거점육성형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발전촉진지역	성장촉진지역(70)	
강원(8/7)	태백시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 정선군	원주시강릉시 동해시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5/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옥천군	단양군	청주시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6/8)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서천군 예산군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10/4)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남(16/5)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경북(16/6)	상주시 영천시 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시 성주군 고령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9/3)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밀양시의령군 거창군 합천군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I 경제개발특별법 II 경제개발특별법 III 경제개발특별법 IV 경제개발특별법 V 제4차 경제개발특별법 9

02 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1 지역개발계획 수립내용

- 지역현황분석을 토대로 비전 및 추진전략, 공간구상, 전략별 지역개발사업 제시 등

비전 및 추진전략, 공간구상

비전
 약동하는 행복강원

3대 목표
 최고의 관광휴양 목적지 (The Great Place to Visit) | 최고의 정취체험 기반 (The Voluble Place to Visit) | 최고의 휴식 공간 (The Better Place to Live)

4대 추진전략
 [전략1] 미래 성장동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내핵 발전촉진 조성
 [전략2] 품격높은 관광 스포츠권 육성 및 환경영양권 조성
 [전략3] 지역특화지역의 관광자원 및 에너지 융 복합산업기반 조성
 [전략4] 자연 생태·역사가 아우러진 한반도 평화 생태벨트 조성

강원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계획

강원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계획

발전촉진형
 1. 최고의 관광휴양 목적지 조성
 2. 최고의 정취체험 기반 조성
 3. 최고의 휴식 공간 조성

거점육성형
 1. 내핵발전권 조성
 2. 지역중핵개발권 조성

공간구상
 내핵발전권: 원주시, 양양군, 양양군, 양양군
 지역중핵개발권: 원주시, 양양군, 양양군, 양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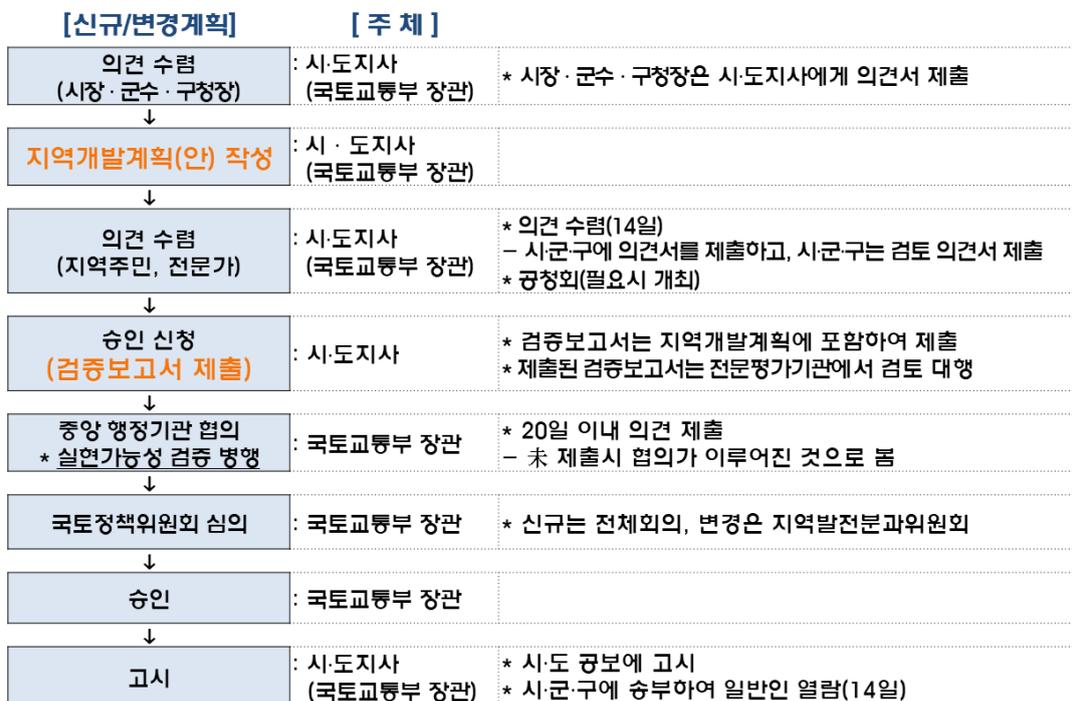
자료: 강원도, 2017. 강원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I 경제개발특별법 II 경제개발특별법 III 경제개발특별법 IV 경제개발특별법 V 제4차 경제개발특별법 10

02 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2 지역개발계획 추진절차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검증보고서(사업단위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를 제출하여 실현가능성 검증(LH) 후 개발계획 승인



02 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3 지역개발사업 유형구분

- 지역개발사업은 지역특화, 관광 등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모사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으로 구분
 - 국비지원(국토부)이 가능한 기반시설 사업은 모사업과 연계성이 높은(진입도로) 연계기반시설사업과 모사업과는 별개로 지역주민 편의 증진 지역 내외 접근성향상을 위한 단독기반시설사업으로 구분



02 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4 지역개발계획 총사업비

-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2016)을 시작으로 2018년 7개 시·도 지역개발계획 승인(발전형, 거점형)완료
 - 7개 시·도 10년간 지역개발계획 총사업비는 기존, 신규 포함 630개, 총사업비는 31조 2천억원 정도로 이중 국비 5조 4천억, 지방비 매칭 민자가 20조 정도임(민간투자유치 사업은 유치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국비 지원)
 - 신규사업 시·군당 국비(기반시설) 120억 수준 계획, 관광·휴양, 산업·생산(산단) 유형지원이 대부분, 기타 주거·생활, 안전·공공 유형임
- 기존사업(개축지구사업 등) 위주로 사업이 기추진, 모사업(민자)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진행률 상이

도	사업수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7개도	630	31,180,898	5,434,336	5,477,190	20,269,373
강원도	87	8,434,966	489,826	516,848	7,428,293
전라남도	131	4,829,263	966,306	1,081,386	2,781,571
전라북도	45	1,197,874	352,909	298,705	546,260
충청남도	99	4,282,033	779,817	1,095,626	2,406,590
충청북도	57	3,025,479	552,806	508,233	1,964,440
경상남도	74	2,199,261	520,189	604,944	1,074,128
경상북도	137	7,212,022	1,772,483	1,371,448	4,068,091

13

02 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5 지역개발사업 지원내용

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역개발 사업구역	국비 지원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진입도로, 연결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불가사업, 타 국비지원사업 중복사업은 제외 -재원 * 성숙지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성장촉진지역사업계정(시·군 한도외), 보조율 100% → 시·군별 신규 지원 최대한도는 약 120억원 수준 -방식 * 국비지원은 10년(계획기간)간 지원, 매년 지원액은 사업경과와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도에서 국비지원사업의 우선순위(관할 시·군 전체 사업 우선순위와 시·군별 사업 우선순위)제출 -기존 법률에 의해 승인된 국비지원사업(계속, 신규)을 우선 지원하되, 매년 우선순위에 따라 국비지원 -지역개발계획 승인 시 확정된 국비지원액 범위 내 변경 매년(6월, 12월), 국비지원액을 확대하는 변경은 5년 주기로 변경 가능
	조세 감면 -기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적용 -법인/소득/지방소득세 * 1000억원 이상 총개발사업비 투자개발사업시행자: (법인/소득)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 면제 * 100억원 이상 투자창업기업: (법인/소득)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인지방소득) 면제 -취득세/등록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 범위내 조례로 감면
	기타 지원사항 -62개 인허가 의제: 지역개발사업 지정(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14종) 및 실시계획승인(48종) 등 -5종 특례(학교 교육과정 특례), 의료시설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체육시설 특례, 원형지 공급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가능(조례) -부담금 감면(산단, 농촌휴양시설, 공장 등) *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발전촉진형 지역에 한해 50% 감면) * 대체조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하천수 사용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자금지원: 지역개발사업자금 지원,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조례) -지자체 채무보증(지방의회 의결) -인허가 투자유치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지역개발통합정보망 / 사업성평가 및 전문가 지정제도
지역활성화지역	추가 지원 * 성숙지역 지역접근성 시설예산 범위 내에서 포괄보조금 50% 추가 지원(최대 100억 원) * 도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제71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

자료: 강원도, 2016, 강원도(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 참고 재정리

14

02 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6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03 투자선도지구 추진현황

1 투자선도지구 공모 개요

- (목적)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개발사업 등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 대상
- (인센티브)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은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이외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하여 혜택 부여
 - 발전촉진형의 경우 기반시설 등 100억 범위, 거점육성형은 50억 범위내 지원
 - 다만, 민간 또는 공공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고려하여 투자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 완화 가능
 - 특별건축구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민간투자 사업성 개선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주요혜택

유형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주요혜택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100억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50억(2020년, 한시적~)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73개 등)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03 투자선도지구 추진현황

2 투자선도지구 지원내용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감면 및 국유재산임대료 (20% 범위내) 감면 부담금감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등) 	* 해당사항 없음
	공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원 외에 추가되는 내용 (지역개발 사업구역 규제특례는 거점육성형 지역에 지정되는 투자선도지구에도 적용) 기반시설 지원 등 재정지원(국가): 지구당 100억원내외 * 별도예산 확보 추진, 미확보시 기존 예산 활용 - 발전촉진형: 기존 성장촉진지역 예산(특수상황지역의 지원여부는 행사부와의 협의 필요) - 거점육성형: 특정지역 예산(지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예산)의 지원범위를 거점형까지 확대 지원 3개 추가특례: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3개 추가인·허가의제(임대전용 산단, 관광특구 및 문화산업지구 지정·고시) 등 규제특례 선택적용 가능 추가 자금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고용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문화부) 및 용지매입비 용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지자체)) 	

03 투자선도지구 추진현황

3 투자선도지구 선정 및 지정 현황

- '15~'22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19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13개 사업 지구지정 완료('22년 9월현재)
 - 낙후지역 전략산업(산업클러스터육성-특장차, 무인기, 에너지, 화장품 등)유치, 관광단지조성, 광역 역세권개발 등 민간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적으로 기반시설 지원

선정연도	지역	사업명
'15년	전북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경북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강원원주	남원주역세권개발
'16년	울산울주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충북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
	전남진도	진도해양복합관광
	충남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17년	광주송정	광주송정KTX역
	강원춘천	강원도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충북괴산	괴산자연드림타운
	전남함평	함평축산특화산업
	충북청주	오송화장품뷰티
'18년	대전유성	첨단국방융합단지
	경남고성	무인기종합타운
	충남보령	원산도해양관광웰니스
'20년	전남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전북김제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
'21년	경남함양	함양이커머스전략산업
'22년	전남신안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

전남 진도 쓸비치 리조트 조성

- 민자 2천106억, 국비 진입도로 등 92억 투입
- 규모 객실 576실 규모, 2019년 7월개관
- 고용인원 200여명 80% 이상 진도군 거주
- 진도 농수특산물 1년간 4억원 매출
- 지역소상공인 매년 6억원 고정 식자재 납품



자료: 대명리조트 쓸비치 진도

03 투자선도지구 추진현황

3 투자선도지구 선정 및 지정 현황

- 공모 이외에 개별 시도에서 투자선도지구 신청시 평가를 통해 투자선도지구 선정
 - 드론비행장(기구축)·무인기통합시험시설('22.12 준공예정) 등 무인기 종합타운(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22. 09)
-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정책과제)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 을 통해 3개 투자선도지구 선정(경주, 통영, 속초 '22. 12)
 - 강소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거점조성을 위해 정책시급성차원의 사업추진
 - 내용 : 철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기능과 주변 도시기능을 초기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계획·개발해(LH, KR)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및 생활거점 조성
 - 복합환승센터, 스포츠 콤플렉스, 문화시설, 에너지시설 등 역세권활성화 사업



자료: KTX 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통영시)

자료: KTX 신경주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조감도(경주시)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 사업비: 912억원(국비 152, 지방비 110, LH650)
- 위치면적: 경남 고성군 동해면 / 371,983㎡
- 시행자: 고성군, LH('22~26)
- 사업내용: 무인기 관련 시설과 기업지원센터, 공원녹지·오피스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자료: 보도자료(국토부, 2022.09)

04 지역수요맞춤형 사업 추진현황

1 지역수요맞춤형 사업 공모개요

- (목적) 기존 SOC 사업 위주 지원에서 탈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H/W-S/W 용·복합 사업을 지원하는 공모 추진
 - 성장촉진지역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일방형'과 지역활성화 지역만 공모가능한 '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으로 사업유형 구분
 - 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 예시 :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공간 정비, 고령자 보행로 정비 등이 해당
- (지원 및 선정) 일방형은 사업당 최대 20억 원, 고령친화형은 2억 원 지원
 - 체류형 관광 사업은 연계 시·군당 20억 원을 지원하여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 준비단계부터 상시 컨설팅 지원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종합평가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
 - 2021년 청년, 귀농귀촌 인구 등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하는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지역수요맞춤형사업 유형 및 지원규모

구분	일반사업	고령친화공간정비사업
대상 지자체	- 성장촉진지역('19.9월 지정)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대상	- 지역활성화지역('15.3월 지정)으로 지정된 22개 시·군 대상
지원 규모	- 최대 20억 원 (체류형관광사업은 2개시·군연계시 40억 원, 3개시·군이상 연계시 60억 원)	- 최대 약 2억 원



04 지역수요맞춤형 사업 추진현황

2 지역수요맞춤형 추진현황

- 2015년 지역개발지원법 개정과 함께 시·군단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총 154개 사업 선정 지원
 - 사업당 20억~30억, 소규모 사업은 2억원 이내에서 지역개발사업 지원
- 사업유형별로는 체험관광, 경관(가로정비)사업 다수, 지역역량사업 비중은 낮음, 2021년이후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으로 생활복지 사업 점차 확대중
 -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선정비율이 높음, 다수 성장촉진지역 시·군이 포함된 결과임
 - 생활복지 사업은 고령친화사업 도입(2018년), 주거플랫폼 사업 도입(2021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탐방로(관광), 시장터 및 주차장조성(산업), 가로길,공원정비(경관), 버스정보시스템(BIS_교통)임

구분	지역산업 (일자리)	체험 관광	지역 경관	생활 복지	교통 서비스	지역 역량	기타	총합계
강원도	2	5	4	2	1	1		15
경상남도	1	6	4	7	-	-	1	19
경상북도	6	8	6	6	6	1	1	34
전라남도	3	9	8	4	8	1	1	34
전라북도	3	4	7	4	3	-	-	21
충청남도	4	3	3	2	-	-	-	12
충청북도	1	5	4	7	1	-	-	18
경상남도·전라남도	-	1	-	-	-	-	-	1
총합계	20	41	36	32	19	3	3	154

삼척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 총사업비 42억(국비 20억)
- 유리전망대, 주민광장(푸드트럭, 나들장터), 테크산책로 등 1.14km
- 고생대지리학적가치 교육공간활용



자료: 삼척시청

1 지역균형발전위원회
2 경제자유구역개발촉진법
3 경제자유구역개발촉진법
4 경제자유구역개발촉진법
5 경제자유구역개발촉진법

05 시도 낙후지역특별회계 운영 현황

1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 지역개발지원법(제71조)에 따라 시·도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에 균형발전사업추진 (2021년 현재 회계예산 편성 지역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충청남도

- ✓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08~20년), 2단계 1기(21~25년) 해당 시·군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

- 인구증가, 노령화지수, 종사자증가율, 의료종사자 수 등 지표를 활용하여 시·도내 낙후지역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지역 선정(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 2021~2030년 충청남도 균형발전기본계획 및 해당 시군 2021~2025년 개발계획을 수립
- ① 도 제안사업(→시군 연계형 사업), ② 시군 경쟁공모 사업(→지역특화산업), ③ 시군 자율사업(→삶의 질 향상)
- 85건 사업발굴, 총예산 6,824억원(년간 1,350억원 투입)



자료: 아주자동차대학

보령 튜닝 생태계조성

- 아주자동차대학과 연계
- 자동차튜닝지원센터
- 부품기업유치, 인력양성
- 총사업비 270억



자료: 태안군청

태안 해양레저반 조성

- 해양안전복합센터 건립
- 만리포 서핑 성지 조성
- 총사업비 157억원

1 지역균형발전위원회
2 경제자유구역개발촉진법
3 경제자유구역개발촉진법
4 경제자유구역개발촉진법
5 경제자유구역개발촉진법

05 시도 낙후지역특별회계 운영 현황

충청북도

- ✓ 충청북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2007~2011년), 2단계(2012~2016), 3단계(2017년~2021년)사업 추진(2022년 이후 4단계 사업 발굴 중)
- ✓ 3단계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21 (5년간)
 - 총사업비 : 3,930억원(균특 297, 도비 1,591, 시. 군비 2,042) (년간 780억)
 - 대상지역 : 발전도가 현저히 낮은 7개 시. 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추진사업 :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행복마을사업, 균특사업
 - 전략사업 :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신규사업
 - 기반조성사업 : 정주여건 개선 등 사회기반시설 신설·개량사업
 - 공모사업 : 지역발전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사업/순위에 따라 그룹별 차등지원
 - 인센티브사업 : 전략.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상위 3~4개 지역 차등지원
 - 행복마을사업 : 주민들의 참여. 협동으로 공동체 회복,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균특사업 : 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사업
 - 재원 :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균특 생활기반계정의 5% 이상
 - 지원방식 : 지역발전도(4그룹)에 따라 도비지원 비율 차등화
 - A그룹(단양, 괴산) : 도비 65%, 시. 군비 35%
 - B그룹(보은, 영동) : 도비 60%, 시. 군비 40%
 - C그룹(옥천, 제천) : 도비 55%, 시. 군비 45%
 - D그룹(증평) : 도비 45%, 시. 군비 55%

보은 속리산 휴양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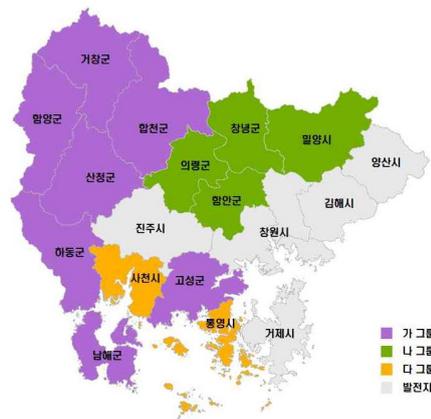
단양 만천하 스카이 워크



05 시도 낙후지역특별회계 운영 현황

경상남도

- ✓ 경상남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2014~2017년), 2단계(2018~2022)사업 추진, 경상남도 발전계획 수립(2018~2022)
- ✓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조례 및 특별회계에 의해 매년 18건의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 추진(연간 200억원 이상)
 - 1단계(2014~2017년): 54개 사업, 3,646억원 (균특 866, 도비 1,242, 시군비 1,538)
 - 2단계(2018~2022년): 84개 사업, 4,491억원 (균특 1,735, 도비 861, 시군비 1,895)
 - * 균특사업(51) : 농림수산 9, 문화관광 27, 환경 4, 보건복지 1, 지역개발 9, 산업경제 1
 - * 자체사업(33) : 농림수산 6, 문화관광 12, 환경 2, 보건복지 3, 지역개발 7, 산업경제 3
 - 경상남도 18개 시. 군별 발전수준 종합점수 및 지역성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후도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함
 - 가그룹 : 거창, 함양, 함천, 산청, 하동, 고성, 남해군(7)
 - 나그룹 : 밀양시, 창녕, 의령, 함안군(4)
 - 다그룹 : 사천시, 통영시(2)
 - 발전그룹 : 진주, 창원, 김해, 양산, 거제(5)



자료: 경상남도, 2018, 경상남도 발전계획 2018~2021. p221

05 시도 낙후지역특별회계 운영 현황

전라북도

- ✓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 14개 시군 중 낙후된 6개 시군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과 관광 중심의 중장기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발전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 운영

• 사업개요

- 기간 : 2011년~ (1기: 2011~2015, 2기: 2016~2020, 3기: 2021~2025)
- 대상 : 6개 시군(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예산 : (1~2기) 연간 총 300억원, (3기) 연간 총 360억원*
* 시군당 연간 60억원(균특 30%, 도비 35%, 시군비 15%, 기타 10%)

• 주요사업내용

- 식품 : (남원)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무주) 천마클러스터, (장수) 장수식품클러스터, (임실) 치즈식품클러스터, (순창)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 관광 : (남원) 남원전통가 조성, (진안) 마이산 자연치유신비체험,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장수) 장수가야 유적정비, (임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순창) 실랜드 관광휴양촌

남원 허브 밸리



임실 섬진강 에코뮤지엄



1 전라북도 특별회계 운영 현황
2 전라북도 지역특화사업
3 전라북도 지역특화사업
4 전라북도 지역특화사업
5 전라북도 지역특화사업

05 시도 낙후지역특별회계 운영 현황

2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유형 종합

- (특화)지역특화자원 활용형(관광_보령, 농수산특산물_금산, 산업_농수산 가공 기업유치_태안, 친환경 및 스마트 농업 등)
- (생활soc)생활soc복합형(복합문화센터, 돌봄센터, 복합체육센터 등)
- (기초서비스)기초서비스기반구축형(응급의료시설, 상하수도설비)
- (광역)문제해결형(해양쓰레기, 수목장_충남도)

추진방식별

- (연계)국비공모사업 선정 확대 연계 사업 (HW선정시 HW매칭+SW/HuW)
- (자체)지자체균형발전기금 자체적으로 HW사업 추진

유형	연계(마중물)	자체
지역특화	-속리산유양관광지 조성(보은) -홍삼한방클러스터 육성(진안) -청년포레스트(의성)·이웃사촌시범마을(의성) 패키지	-미래환경농업서비스 지원기반 구축(서천) -만천하스카이워크(단양)
생활soc	-태양광 랜드마크도서관 건립(증평)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밀양)	-강경읍 활력체육터 조성(논산)
기초서비스	-급수지역 지방상수도확장사업(사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정양) -당직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지원(금산)
광역연계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보령, 서천, 태안)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공주, 논산, 부여, 청양) -황매산권 관광협력

자료: 시도 낙후지역특별회계 지원사업 참고

1 전라북도 특별회계 운영 현황
2 전라북도 지역특화사업
3 전라북도 지역특화사업
4 전라북도 지역특화사업
5 전라북도 지역특화사업



III 성장촉진지역 운영 효과

- 1. 성장촉진지역 지원 성과 • 28
- 2. 성장촉진지역 주요지표분석 • 31

01 | 성장촉진지역 지원 성과

1 재정 ·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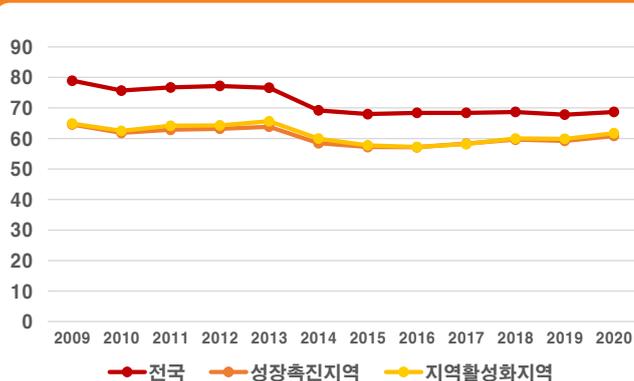
∴ 재정자주도 : 성장촉진지역 재정자주도는 점차 증가추세

- 성장촉진지역의 재정자립도(중앙, 시·도 지원 지방교부세 제외)는 변화가 미비하고, 전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
- 반면, 재정자주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 시·군·구 자율편성),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 등 중앙지원확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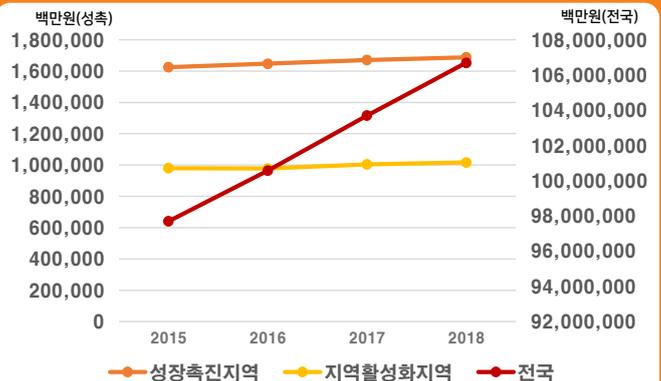
∴ 지역내총생산 : 성장촉진지역, 지역활성화지역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1.3%내외

- 전국 지역내 총생산은 연평균 3.0%로 지속적 증가
- 반면, 성장촉진지역과 지역활성화지역의 평균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은 거의 변화가 미비한데,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활동, 서비스 등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함

재정자주도



GRDP(실질_2015기준)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재정자주도),(GRDP_지역소득)

01 성장촉진지역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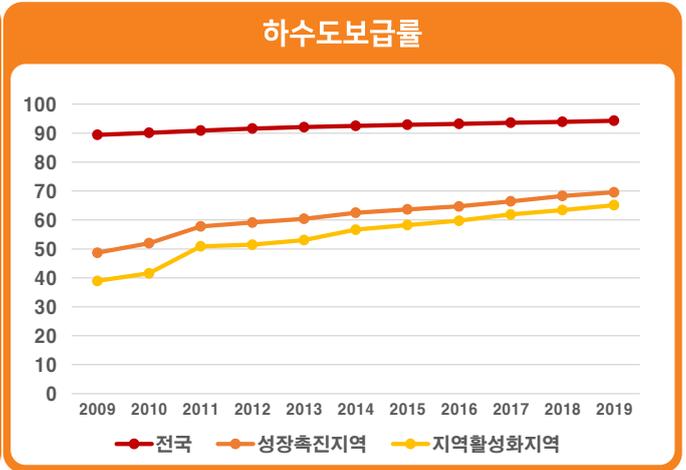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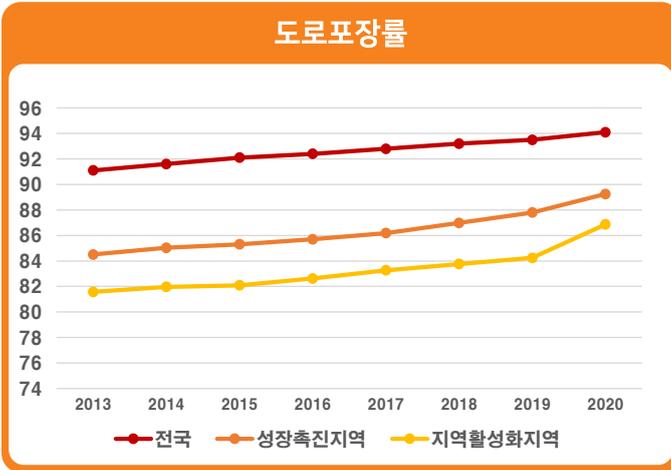
2 교통 · 인프라

※ 도로포장률 : 성장촉진지역 도로포장률은 전국평균보다 낮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함

- 포장도로 연장비율인 도로포장률은 전국평균은 94.1%이나, 성장촉진지역 89.2%, 지역활성화 지역 86.9%로 낙후지역일 수록 도로포장률이 낮아, 기업유치, 물류이동 등 경제활동에 있어 상대적 제약이 따름

※ 하수도보급률 : 성장촉진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평균보다 낮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당지역 총인구에서 공공하수처리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수혜구역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하수도 보급률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침수 예방차원(침수피해지역 관로, 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등)에서 중요한 지표임
- 전국 하수도보급률은 94.3%이나, 성장촉진지역은 69.6%, 지역활성화 지역은 65.1%로 낙후지역일수록 하수도 보급률이 낮음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도로포장률), (하수도보급률)

01 성장촉진지역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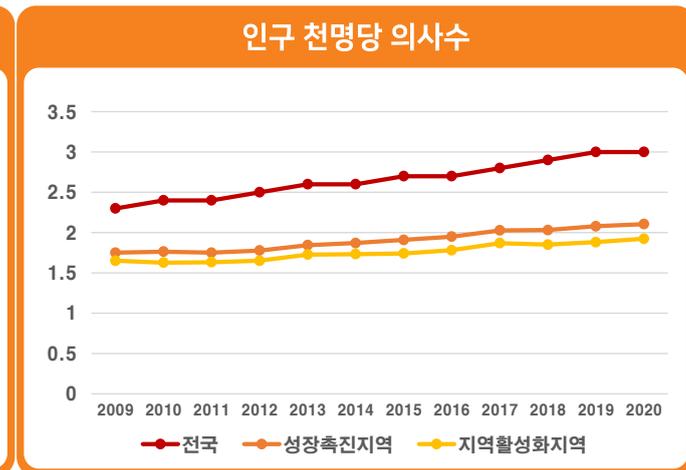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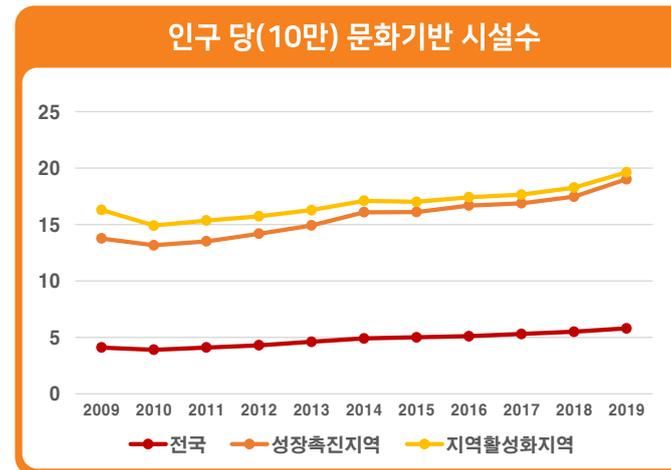
3 문화 · 복지

※ 공연문화시설 접근성 :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수는 많은편이나, 생활SOC 접근성은 여전히 낮음

- 성장촉진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연문화시설 접근성은 평균 11.51km(국토모니터링지표_2020)로 전국평균 7.22km대비 1.59배 접근성 열악

※ 인구 천명당 의사수 : 성촉지역 의사수는 전국평균보다 낮음

- 전국 평균 인구천명당 의사수(10년)는 연평균 2.4%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촉지역은 1.7%로 낮음
- 성촉지역 인구대비 의사수는 인구감소에 영향을 받으나, 노인인구증가, 기초의료서비스 혜택 등을 고려 할때 의사수 부족이 나타남 (의료기관 중사 의사의 경우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후지역보다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선호로 인해 의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 당(10만) 문화기반 시설수), (인구 천명당 의사수)

02 | 성장촉진지역 주요지표분석

1 | 성장촉진지역 주요 지표별 격차분석

인구, 경제, 생활서비스 등에서 전국과 성촉, 성촉지역간 격차 분석

- ✓ 전국과 성장촉진지역 격차는 해당 지표 평균값(비중)과 증가율(속도)로 검토
- ✓ 성장촉진지역 내 격차는 변동계수(해당년도 표준편차/ 평균값) 변화로 판단

- (인구증감률) 성장촉진지역 : 전국대비(2020년) 1.6% 낮은 -1.87%
 - 성장촉진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구증감률 격차 점차 확대
 - 성장촉진지역 내 인구증감 변동계수는 감소하고 있어 지역간 격차는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음
 - (합계출산율) 성장촉진지역 : 전국평균(2020년)에 비해 0.3% 높음
 - 과거(2009년_0.2%)에 비해서도 격차가 증가하고 있어 성장촉진지역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장촉진지역 내 합계출산율 변동계수는 확대되고 있어 지역간 출산율 격차 발생
- ⇒ 인구측면에서 **출산율은 전국에 비해 높지만, 인구증감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지역 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인구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장기를 거치며 다양한 이유로 인구유출이 증가하기 때문** 이에 **인구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구분		전국vs성촉지역	성촉지역내 격차
인구	인구증감률	비중: 2020년 현재 1.6% 낮음 속도: 격차 증가추세(09년 1.2% → 20년 1.6%) ⇒ 전국대비 성촉지역 인구감소 증가로 격차증가	변동계수 축소 2009년 166.9% → 2020년 61.7% 변동계수 축소 2015년 179.5% → 2020년 61.7%
	합계출산율	비중: 2020년 현재 0.31% 높음 속도: 격차 증가추세(09년 0.24% → 20년 0.31%) ⇒ 전국대비 성촉지역 상승으로 격차증가	변동계수 확대 2009년 16.0% → 2020년 25.7% 변동계수 확대 2015년 19.0% → 2019년 22.9%

31

02 | 성장촉진지역 주요지표분석

- (경제소득_GDP) 전국대비 0.1% 수준으로 매우 낮고, 전국 증가율(2015~2018) 3.0%보다 낮은 1.3% 수준으로 성장촉진지역의 경제성은 낮게 나타남
- (경제소득_재정자주도) 성촉지역은 전국대비(2020년) 7.9% 낮으나, 2009년대비 격차는 축소
 - 성장촉진지역 내 재정자주도의 변동계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지역생산(원제품, 부품, 농축산물품 등) 기반 확대 지원방안 필요**
- 도로포장률 등 기반시설의 지속적 지원으로 전국대비 성촉지역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성촉지역내 변동계수도 감소하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점차 축소
 - 도로포장률이 전국대비 4.9% 낮으나, 하수도보급률은 24.7%, 상수도 보급률은 15.3% 낮아 기반시설별 격차가 발생
 - ⇒ **지속적인 기반시설 지원과 공급 필요**

구분		전국vs성촉지역	성촉지역내 격차
경제 소득	GDP(실질)증가율	비중: 2018년 전국대비 GDP 0.1% 수준으로 낮음 속도: 격차 증가추세(성촉 1.3% → 전국 3.0%) ⇒ 전국대비 성촉지역 증가미비로 격차증가	변동계수 축소 2015년 110.1% → 2018년 108.7%
	재정자주도	비중: 2020년 현재 7.9% 낮음 속도: 격차 감소추세(09년 14.3% → 20년 7.9%) ⇒ 전국대비 성촉지역 증가로 격차감소	변동계수 확대 2009년 7.4% → 2020년 7.9% 변동계수 확대 2015년 7.6% → 2020년 7.9%
기반시설	도로포장률	비중: 2020년 현재 4.9% 낮음 속도: 격차 감소추세(13년 6.6% → 20년 4.9%) ⇒ 전국대비 성촉지역 상승으로 격차감소	변동계수 축소 2013년 7.9% → 2020년 7.4% 변동계수 축소 2015년 8.1% → 2020년 7.4%
	하수도보급률	비중: 2019년 현재 24.7% 낮음 속도: 격차 감소추세(09년 40.7% → 19년 24.7%) ⇒ 전국대비 성촉지역 상승으로 격차감소	변동계수 축소 2009년 42.0% → 2020년 20.7% 변동계수 축소 2015년 23.1% → 2020년 20.7%
	상수도보급률	비중: 2019년 현재 15.3% 낮음 속도: 격차 감소추세(09년 30.3% → 19년 15.3%) ⇒ 전국대비 성촉지역 상승으로 격차감소	변동계수 축소 2009년 26.7% → 2020년 15.2% 변동계수 축소 2015년 17.9% → 2020년 15.2%

32

02 성장촉진지역 주요지표분석

- 성장촉진지역내 고용률과 실업률 변동계수는 확대되고 있어, 성촉지역내 일자리 격차는 점차 증가
 ⇒ **일자리 정체지역에 대한 지역전략산업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마련 필요**
 - 인구천명당 종사자의 경우 전국에 비해 39.8명 낮아 **절대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성촉지역내 변동계수도 2010년 대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종사자의 지역간 격차가 발생
 - 생산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내 일자리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전국과의 격차가 성촉지역내 **외국인증가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성촉지역내에서도 변동계수가 감소하고 있어, 성촉지역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증가** 나타나고 있음
- ※ 다만, 성촉지역내 인구감소가 크므로 고용률, 실업률, 사업체, 종사자 등 변동설명시 고려되어야함

구분	전국vs성촉지역	성촉지역내 격차
일자리	고용률 비중: 2020년 현재 7.2% 높음 속도: 격차 증가추세(13년 6.5%→20년 7.2%) ⇒ 전국고용률 감소로 격차증가(성촉정제)	변동계수 확대 2013년 6.8%→2020년 7.3% 변동계수 확대 2015년 7.1%→2020년 7.3%
	실업률 비중: 2020년 현재 2.7% 낮음 속도: 격차 증가추세(13년 2.2%→20년 2.7%) ⇒ 전국실업률 증가로 격차증가(성촉정제)	변동계수 확대 2013년 53.8%→2020년 64.7% 변동계수 확대 2015년 51.3%→2020년 64.7%
	인구천명당 사업체 비중: 2019년 현재 11.8개 많음 속도: 격차 증가추세(13년 3.3개→19년 11.8개) ⇒ 전국대비 성촉지역 증가로 격차증가	변동계수 축소(유사) 2010년 15.6%→2019년 15.2% 변동계수 확대 2015년 14.6%→2019년 15.2%
	인구천명당 종사자 비중: 2019년 현재 39.8명 적음 속도: 격차 감소추세(10년 62.4명→19년 39.8명) ⇒ 전국대비 성촉지역 증가로 격차감소	변동계수 확대 2010년 17.9%→2019년 18.3% 변동계수 축소 2015년 20.0%→2019년 18.3%
	인구천명당 외국인 비중: 2020년 현재 3.7명 높음 속도: 격차 감소추세(09년 6.0명→20년 3.7명) ⇒ 전국대비 성촉지역 외국인 증가로 격차감소	변동계수 축소 2009년 81.0%→2020년 63.9% 변동계수 축소 2015년 72.3%→2020년 63.9%

33

02 성장촉진지역 주요지표분석

2 생활서비스관련 격차 현황

- 생활서비스관련 시설 접근성은 전국평균에 비해 열악하고, 성장촉진 지역내에서도 격차 확대가 나타남
 - 생활공원,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평균접근성 전국평균대비 1.7배 이상임

구분	전국vs성촉지역	성촉지역내 격차	
생활 서비스	인구천명당 의료인 비중: 2020년 현재 0.9명 낮음 속도: 격차 증가추세(09년 0.55명→20년 0.9명) ⇒ 전국대비 성촉지역 증가비율로 격차증가	변동계수 확대 2009년 28.3%→2020년 32.9% 변동계수 확대 2015년 29.5%→2020년 32.9%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비중: 2019년 현재 13.2개 많음 속도: 격차 증가추세(09년 9.7개→19년 13.2개) ⇒ 전국대비 성촉지역 증가로 격차증가	변동계수 축소 2009년 60.7%→2019년 51.0% 변동계수 축소 2015년 55.9%→2019년 51.0%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비중: 2018년 현재 11.7개 많음 속도: 격차 증가추세(09년 8.7개→18년 11.7개) ⇒ 전국대비 성촉지역 증가로 격차증가	변동계수 축소 2009년 48.1%→2019년 39.9% 변동계수 축소 2015년 40.6%→2018년 39.9%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 비중: 2020년 현재 성촉평균은 19.64km로 전국평균 11.85km대비 1.66배 접근성 열악 속도: 접근성 격차확대(18년 6.82km→20년 7.80km)	변동계수 확대 2018년 37.8%→2020년 42.9%	
	생활권공원접근성 비중: 2020년 현재 성촉평균은 9.83km로 전국평균 5.38km대비 1.83배 접근성 열악 속도: 접근성 격차감소(18년 4.72km→20년 4.45km)	변동계수 축소 2018년 57%→2020년 55.9% (성촉하위 10위 평균 접근성 17.2km→15.6km로 감소)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접근성 비중: 2020년 현재 성촉평균은 8.07km로 전국평균 4.63km대비 1.74배 접근성 열악 속도: 접근성 격차확대(19년 3.41km→20년 3.44km)	변동계수 확대 2019년 32.4%→2020년 34.1% (성촉하위 20위 평균 접근성 증가)
		공영문화시설 접근성 비중: 2020년 현재 성촉평균은 11.51km로 전국평균 7.22km대비 1.59배 접근성 열악 속도: 접근성 격차확대(18년 4.19km→20년 4.29km)	변동계수 확대 2018년 24.0%→2020년 24.8% (성촉하위 10위, 하위 20 평균 접근성 모두 증가)
	종합사회복지관 접근성 비중: 2020년 현재 성촉평균은 28.06km로 전국평균 14.50km대비 1.94배 접근성 열악 속도: 접근성 격차확대(19년 13.2km→20년 13.6km)	변동계수 확대 2019년 53.0%→2020년 54.0% (성촉하위 10위, 하위 20 평균 접근성 모두 증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 비중: 2020년 현재 성촉평균은 21.97km로 전국평균 12.64km대비 1.74배 접근성 열악 속도: 접근성 격차감소(18년 10.3km→20년 9.3km)	변동계수 축소 2018년 57%→2020년 55.9% (성촉하위 20위 평균 접근성 38.6km→37.3km로 감소)	
	지진옥외대피소 접근성 비중: 2020년 현재 성촉평균은 8.22km로 전국평균 4.90km대비 1.68배 접근성 열악 속도: 접근성 격차확대(18년 1.69km→20년 3.32km)	변동계수 확대 2018년 45.9%→2020년 87.2% (성촉하위 10위, 하위 20 평균 접근성 모두 증가)	

주: 국토모니터링 국토지표에서 2018년자료는 도로올변동, 시설범위 변동 등으로 이후 자료 시계열 비교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34



IV

성장촉진지역 추진방향

1. 성장촉진지역 지원개선 기본방향 • 36
2. 성장촉진지역 위상 및 역할정립 • 38
3. 성장촉진지역 사업유형 확대 • 40

01 | 성장촉진지역 지원개선 기본방향

“ 성장촉진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은 단기(공모사업), 장기(지역개발계획 수립)로 구분하여 접근 ”

단기 개선방안

- ✓ 지역특성(산업생태계, 인구계층, 생활SOC서비스)을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사업유형 확대 및 지원
 - 성촉지역내 일자리, 인구, 생활서비스 등 분야별 격차 해소를 통해 성촉지역 동반성장 유도
 - : 성촉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자발적 계획수립을 통한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 : 주민편의증진사업 복합기능(2가지 기능이상_일자리, 정주, 교통, 주민공동체, 안전정보화) 사업 공모, 유연한 사업유형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예산, 가점) 제공으로 창의적 수요맞춤형 사업 지원
 - 지역내 거점성장지역으로써 주변 성촉지역에 인력 및 기업자본 확산을 도모하는 지역 앵커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사업지구 개발
 - : 성촉지역 중 산업, 생활교통, 생활서비스시설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 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집중 지원(주변지역 거점도시-주변성촉도시 상호연계사업 발굴 추가 인센티브)
 - : 시·도내 타 성촉지역에 인력, 기술, 산업 파급효과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국비지원 확대 근거 확보 (지정공모제_광역대중교통 역세권 사업, 6차 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

I 경제주요분야
 II 경제주요분야
 III 경제주요분야
 IV 성장촉진지역
 V 지역개발계획수립

01 성장촉진지역 지원개선 기본방향

장기 개선방안

✓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고, 종합적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할수 있도록 지역개발계획 개편

- 성장촉진지역 성과지표(인구, 경제, 생활서비스 등)관리를 통해 성촉지역 모니터링 강화
- 지역개발계획 구상(시·도단위), 시행계획(시·군단위)구분하여 종합계획반영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수요맞춤형사업 등 점단위 개발사업지구 포함)
- 지역(시·도) 균형발전 종합계획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개별 사업계획보다는 시·군 연계, 시·도차원의 전략특화사업과 네트워크 등을 중점으로 계획 수립 추진

⇒ 매년 실시하는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범위의 사업유형과 집중예산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개선

⇒ 10년단위 지역개발계획(시도)의 재수립(2027년이후) 시기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개발계획 개선방안 제시

02 성장촉진지역 위상 및 역할 정립

1 성장촉진지역 구분

▪ 성장촉진지역의 지역활성화차원에서 미래성장가능성, 균형발전공간전략 등을 고려하여 **핵심거점도시**와 **성장활력도시**로 구분하여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연계), 중복제외로 분산집중강화 전략 도모

- 현재 다양한 부분의 발전지표로(경제, 인구, 소득 등) 인해 성촉지역 지원구분은 시도내 가장 낙후된지역(지역활성화)과 기존 성촉지역 등으로 구분가능(재정지원 근거활용)
: 재정자립 등 발전지표 적용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낙후도는 상이함
- 핵심거점도시는 시도 지역 공간입지상 교통, 인력, 자본 등에 있어 거점역할을 수행할수 있는지역으로 시급이상 지역 또는 분야별 거점가능지역을 선정하여 주변 **저발전지역에 사업효과를 확산할수 있는 사업 지원**(인력양성 및 파견, 연구개발 및 보급, 대중교통거점센터 및 광역노선연계 등)
- 성장활력도시는 핵심거점도시 이외지역으로 농업, 제조업, 관광서비스업 등 산업생태계에 따른 산업일자리창출 사업을 핵심으로 지원하고, 정주여건관련 서비스지원 사업 추진
: 성장활력도시 중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 경쟁력(혁신) 미흡지역 등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 차별화추진



02 성장촉진지역 위상 및 역할 정립

- ✓ 시도 및 시군구 균형발전 사업 재정지원 등 차등지원(매칭비율)을 위해 시도내 시군구 구분
 - 시도 전체 시군구지역을 시급과 군급지역으로 이원화 하여 도비지원에 있어 정액 또는 정량으로 지원(충남, 전북)
 - 지역을 지역발전도 및 자생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3~4개구분(충북, 경남)
 - : 충북은 4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성촉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역발전도 **최하의 A부터 C그룹(3단계)**에 포함(충북은 시급도시를 제외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함)
 - : 경남은 3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성촉지역은 낙후도 수준이 높은 가부터 나그룹에(2단계) 포함**

시·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지원 유형구분

구분	균형발전지원유형	도비지원비율	비고
충청북도	A그룹: 5년마다 지역발전도 조사결과 최하위 2개 시군	65%	8개 시군
	B그룹: 5년마다 지역발전도 조사결과 차하위 2개 시군	60%	
	C그룹: 5년마다 지역발전도 조사결과 A·B그룹을 제외한 차하위 2개 시군	55%	
	D그룹: 5년마다 지역발전도 조사결과 A·B·C그룹을 제외한 기타 시군	45%	
충청남도	시지역	60억균등	8개 시군 (20년 1개 시군 추가)
	군지역	80억균등	
경상남도	'가'군: 7개 군(자생적으로 어려운 지역)	지원총액의 63% (시군별 9%균등)	13개 시군
	'나'군: 4시·군(현재 자생적 성장이 어려우나, 향후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	지원총액의 27% (시군별 6.75%균등)	
	'다'군: 2개시(상대적 발전지역으로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지역)	지원총액의 10% (시군별 5%균등)	
전라북도	시지역	30억	6개 시군
	군지역	34억(균등)	
경기도	시지역	85%	
	군지역	75%	

자료: 대구경북연구원,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운영 방안연구, 2016.

03 성장촉진지역 사업유형 확대

1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수도권 은퇴자, 청년층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가 복합된 생활시설** 마련을 위해 **1개소당 약 30억 국비** 지원 계획('23) : 설계비 1차년지원, 30개소 선정 예정
- 기존 기반시설 HW사업이외에 해당 사업유형에 적합한 SW 및 휴먼웨어 사업
(교육프로그램, 창업자금, 주거비 지원, 스마트시스템 구축 등)

주민생활편의 증진사업 유형(예시)

일자리	정주	생활서비스	주민공동체	안전정보화
귀농귀촌 공통텃밭지원	근로자주택	제조업종사자 친환경차렌트비 (청춘드림카:부산)	산림일자리발전소	스마트팩토리
산단혁신지원센터(기업지원) 조성	게스트하우스(창업지원)	친환경대중교통버스및정류장지원	시니어인턴십(사회기업컨설팅)	스마트팜지원
창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사관학교)	주거플랫폼 보급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지원(생활방역,공예)	관광안전스마트 시스템구축
귀농귀촌 지원(농부인턴십)	의료 플랫폼 시범추진	주차비용 지원 (전통시장 민간주차장활용)	희망문화학교	재해예방시설정비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등	생활 SOC 확산	취약·노인교통비지원(교통바우처)	공동작업장 구축	디지털비대면의료시스템구축
창업자금(공제)	주거임차비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의료+복지)	마을인프라 정비	헬스케어, 안전 애플리케이션
연구인력채용 자금지원	의료서비스 지원비	문화체험서비스지원(비용,인력)	주민마을 조직 컨설턴트	스마트 설비 점검 인력양성
특화산업 전문 컨설팅		소규모공원및생활운동시설정비	주민주도사회적기업발굴지원	
전문직업학교 현장실습 지원			노인여성일자리교육 (경력단절인, 외국인 등)	
중사자, 주민생활SOC 공동활용				
일터 공원, 주차장 복합화				

03 성장촉진지역 사업유형 확대

2 지역발전투자협약 문제점 및 특징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의 **사업선택권 확대(계획재량)**, 예산의 용도 및 사용조건의 **자율성강화** (포괄계정 및 예산책임제), **이해상충조정기능 강화(부처합동지원기구)** 필요
 - (사업확대) 지자체예건(재정, 특화도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제시(사업유형 및 정부사업메뉴얼 등)는 지자체 창의성에 기반한 자립적 지역발전 유도 제한
 - (재정 자율성)부처별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집합관리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재정의 유연성 제약
 - (조정기구)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 인식조사결과 관계부처와의 협상과정에서 개별부처별로 대응과 소극적 부처 대응에 불만족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이후 각 부처별 추진하는 지역협약사업은 시군단위에 집중적인 **재정투입, 정량데이터 기반의 수요확보 계획** 등의 특징이 나타남

유형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농촌협약(시범사업)
대상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전국 89개 시군구	·일반농산어촌113개(해수부 소관10개 제외)
목적	·인구감소 및 소멸지역의 종합적 지원으로 인구감소 대응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사업 지원
지원내용	·시군 연간 150억 내외(차등지원)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 공모 시 가점 부여(사업우선할당 등 타부처 권고)	·5년간 개소당 국비 최대 300억 (생활권조성, 주거공간개선, 농촌관광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사회적 농업활성화, 주민주도 서비스)
주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41

03 성장촉진지역 사업유형 확대

3 위기극복형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방안

- (계획)생활권 계획은 종합적 생활SOC, 기초서비스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기초생활서비스 지원, 복합서비스 접근보장, 응급상황대응시스템 구축 등 고려
- (조직)읍면단위로 주민편의시설 및 서비스 수요를 파악할수 있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전담협의체(주민, 지자체 등) 구성
- (전략사업)일자리,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지역종합계획을 기존 다부처 사업발굴 및 연계 등과 결합하여 추진
 - : 주거플랫폼, 대중교통거점, 산업단지재생 등 국토부 특화사업과 다부처 패키지 사업을 연계할 수 사업전략 마련
- (디지털 기반구축)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등 산업, 생활전반에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디지털스마트화 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방안 및 로드맵 제시(성촉지역 시범사업 추진 등)
- (예산) 장기로드맵과 종합계획을 토대로 연간 100억이상 집중지원 시도, 시군 매칭(5:5기준 + 유연성 확보)
 - : 유연한 예산 및 사용용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시군, 시도, 중앙 매칭 조정_낙후지역 균형발전기금 지역별 지원비중 참조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사업(예시)_균형발전사업(국토부)

분야	사업대상예시
삶의질제고	·주민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복지·체육 등 생활SOC 공급 및 이용률 제고 ·주거플랫폼 및 행복주택 활성화
공간혁신	·중소도시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권 육성 ·효율적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자 중심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토교통부, 2020,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지원 및 제도개선연구, p100. 참고 재정의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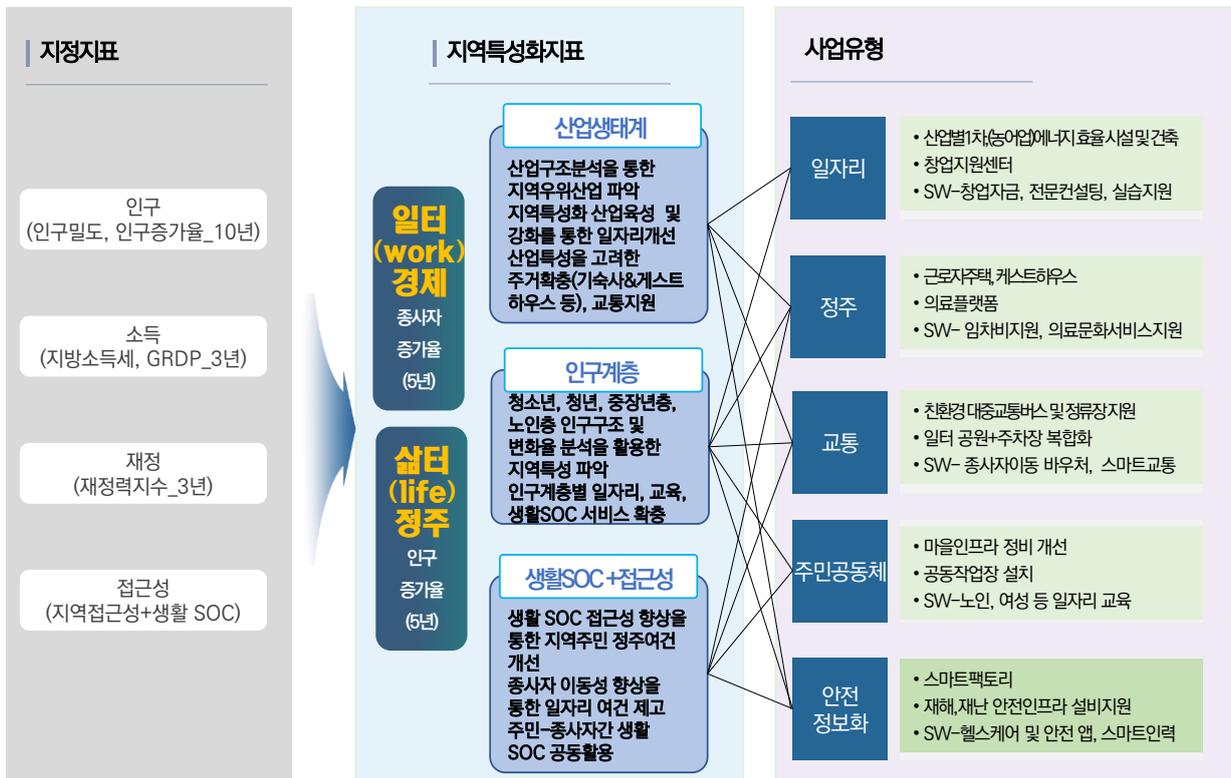
V

충남도 성장촉진지역 추진 제언

- 1. 성장촉진지역 특성화전략 · 44
- 2. 성장촉진지역 사업유형 도출 · 48

01 | 성장촉진지역 특성화전략

1 | 성장촉진지역 특성화 유형구분



I 경제개발특별지역
II 산업개발특별지역
III 관광개발특별지역
IV 지역개발특별지역
V 생활SOC특별지역

01 성장촉진지역 특성화전략

2 성장촉진지역 특성화 유형(산업)

■ 일자리관련 기업유치, 지원시책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산업기반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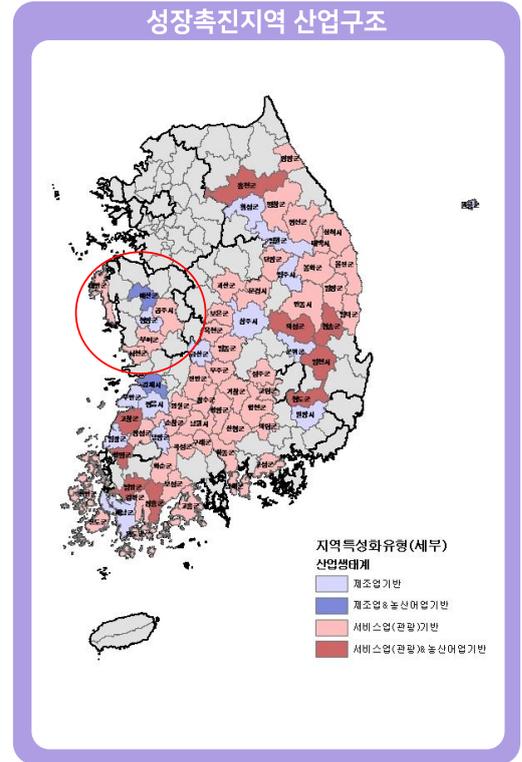
- 1차 농·어·산림업의 경우 6차 농업 및 귀농·귀촌 일자리 마련
- 2차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 생산단지 지원, 창업지원
- 3차 서비스업의 경우 기술연구 및 관광서비스업 지원

: 1차 농업기반우위 지역은 해당시군 1차농업 종사자 비중이 성촉평균(206명)보다 높고, 증가율(2017~2019년) 평균 이상 상승 지역(2.5%)

: 해당 산업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우위 산업(해당지역 산업종사자 증가율 격차 높은 산업, 단 2차산업의 경우 비중이 적고 3차 종사자 증가 비중30% 이내) 증가율이 높은 산업기반 파악

유형		비고	
제조업	제조업기반	14개	지역특화제조업육성
	제조업&1차농산어업	2개	
서비스업	서비스업(관광)기반	46개	관광서비스(숙박, 도소매)
	서비스업(관광)&1차농산어업	9개	지역공동체지원

■ 충남 성촉지역의 경우 전국 성촉지역과 비교해 **서비스업** 기반지역(공주, 부여, 서천, 태안), **농업제조업기반**(예산, 청양)으로 구분가능함으로 맞춤형 사업 발굴 필요



I 2024년 1월 15일 기준
II 2024년 1월 15일 기준
III 2024년 1월 15일 기준
IV 2024년 1월 15일 기준
V 2024년 1월 1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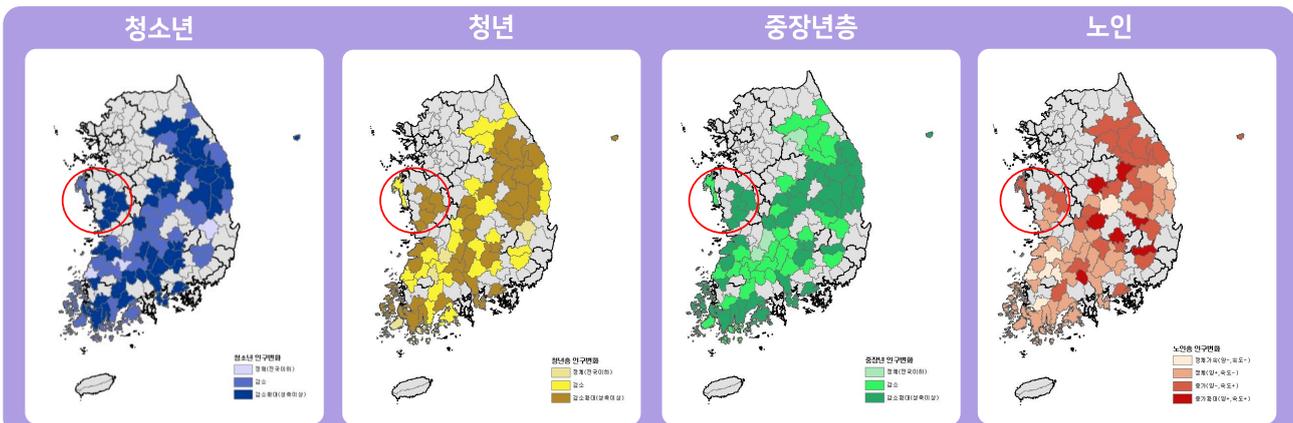
01 성장촉진지역 특성화전략

2 성장촉진지역 특성화 유형(인구)

■ 성촉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노인 등 인구계층구조를 파악하여 지역특성 맞춤형 지원 모색

- (청소년/청년층) 성촉지역 평균(-4.16%), 전국 평균(-2.10%) / 성촉지역 평균(-3.12%), 전국 평균(-1.32%)
: **청소년 감소 지역** : 출산 및 신혼부부지원, 아동 교육여건 확충, 청소년 교통안전 지원, 일자리확충(가족단위 유출 방지)
: **청년 감소지역** : 청년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귀농귀촌대상 지원대책 마련(시급&확대), 종합패키지 지원
- (중장년층) 성촉지역 평균(-0.35%), 전국 평균(-0.98%)과 비교
: **중장년층 감소 지역** 민간기업투자 유치 지원, 지역기반산업육성, 지역특산물 혁신 등 일자리+정주 패키지 지원
- (노인층) 해당 시·군의 노인층 인구 **증감 속도와 현재 비중**을 성촉지역 평균증가율(1.89%) 및 평균 비중(30.84%)과 비교
: **노인인구증가 지역** : 노인일자리, 창업, 복지지원, 인프라 지원, 통합돌봄서비스 확충(시급) 종합패키지 지원

■ 충남 성촉지역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감소확대 지역**으로 인구계층별 지원사업 발굴 모색 필요



I 2024년 1월 15일 기준
II 2024년 1월 15일 기준
III 2024년 1월 15일 기준
IV 2024년 1월 15일 기준
V 2024년 1월 1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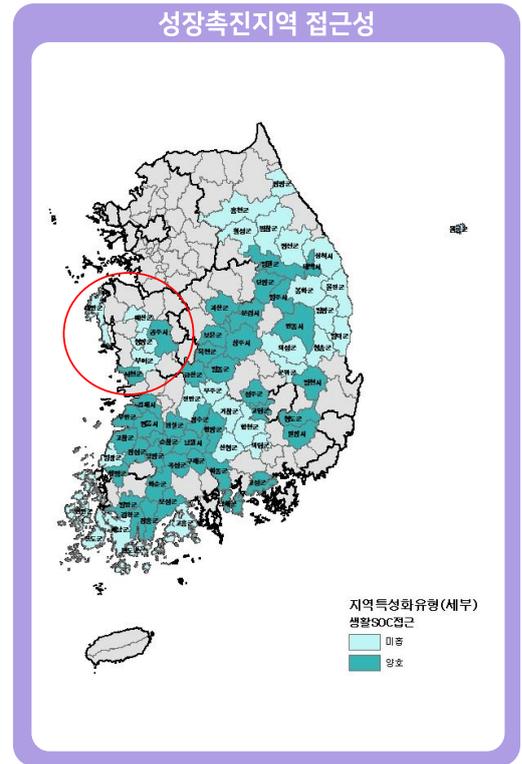
01 성장촉진지역 특성화전략

2 성장촉진지역 특성화 유형(접근성)

-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 의료, 문화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 생활 SOC확충 및 접근성 개선 고려
 - 상대적 미흡지역을 대상으로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타겟팅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필요
 - : 종사자 증가지역의 경우 주거플랫폼 강화와 복합 생활SOC(주민-종사자 공동활용) 확대
 - : 상대적 인구 감소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생활SOC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이동 지원
 - : 인구 및 종사자 증가가 상대적 미흡지역의 경우 기반여건(일자리, 인구)이 부족함으로 디지털, 스마트 서비스 확충(하드웨어 한계)
 - 상대적 양호지역은 시설확충보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시설 지원

유형		비고	
생활SOC 접근성	미흡	30개	종사자지원 주거플랫폼 확산, 지역주민 생활서비스 지원
	양호	41개	상대적양호한 생활서비스 지역은 소프트소규모 지원 확대

- 충남 성촉지역의 경우 전국 성촉지역과 비교해 생활 SOC양호(공주, 서천)한 지역과 미흡(예산, 청양, 부여, 태안)지역이 구분됨으로 생활서비스 지원 맞춤형지원 사업 발굴 필요



02 성장촉진지역 사업유형 도출

1 지역균형발전지원 패키지사업 유형(안)

(유형1) 성장거점 확산형

- 성촉지역 중 산업, 생활교통, 생활서비스시설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 계획수립을 검토하여 집중 지원(주변지역 거점도시-주변성촉도시 상호연계 사업 발굴 추가 인센티브)
- 생활권 및 지역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원 집중
- (세부유형) 문화재,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관광형, 산단,기업,대학 중심의 지역산업형, 농산물,특산물을 활용한 미래농업형 등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지역자발적 제안(유연성 확보)

- ✓ '인구 6만의 10%인 6천명 재학생이 있는 강원대삼척캠퍼스와 지자체와의 지역협력을 위해 지역협력관(기획팀 계장)과 대학 기획처와의 주간 업무협의(상호 다양한 내용 협의의 앵커기능)추진' _ 강원대삼척캠퍼스 기획처장
- ✓ '창업대상을 외부청년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학생 정착을 위해(주소지 이전성과도 있지만, 졸업후 이동 지속성 부족) 재학생 대상 창업공간 및 지원 확대 필요 재학생 70%수도권출신이고 나머지 출신도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지역 내 취업이 전무함' _ 강원대삼척캠퍼스 기획처 부처장
- ✓ '삼척의 경우 소방방재, 에너지 특성화대학원을 운영중으로(4년전) 이미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아직 지역산업, 기업 기반이 열악함. 공모선정등 지원과의 미스매칭 발생' _ 강원대삼척캠퍼스 기획처 부처장
 - 대학특화산업 플랫폼 지원사업(안)
 - 목적 및 필요성: 지역내 재학생 정착률제고를 위한 창업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유휴공간_도시재생 연계 필요)
 - 사업유형: 도심내 대학캠퍼스(미네르바 스쿨) 확장을 위해 유휴공간 활용, 창업공간 및 시설, 장비,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대학원 커리큘럼을 지역내특성화 기업(발전사 등)이 요구하는 인력교육 추가, 재교육수요(화력발전 인력 재교육), 학생인턴십 등

02 성장촉진지역 사업유형 도출

■ (유형2) 지속가능발전형

: 성촉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수요를 고려하여 자발적 계획수립을 통한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 주민편의증진사업 복합기능(2가지 기능이상_일자리, 정주, 교통, 주민공동체, 안전정보화) 사업 공모 (세부유형) 주거, 문화, 통합돌봄 플랫폼, 응급의료 등 생활SOC와 주민공동체를 고려한 생활편의확충형과 지역 상하수도, 방재안전 등 기초서비스시설 지원을 위한 기초서비스 개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성장거점확산		지속가능발전	
지역경제육성형 (지역특화)		생활편의확충형 (생활SOC+주민공동체)	기초서비스개선형 (최저서비스+광역기초시설정비)
-문화재,자연경관->지역관광형 -산단기업,대학->지역산업형 -농산물,특산물->미래농업형		-주거플랫폼 -문화플랫폼 -통합돌봄(의료)플랫폼 -교육안전플랫폼 등	-상하수도개선형 방재안전화보형(침수도로, 마을제방, 도로확폭 등)
HW	창업,미래농업센터설립 -산업단지,기업유치 -관광시설설치 등	-주택,문화,복지,체육,돌봄 등 센터설립 -응급의료시설 리모델링 -주차장개선(전통시장, 상업지) -안전통학시설개선 등	-광역상수도관로설치 및 개선 -이용자 안전시설개선(도로, 제방, 육벽 등) -스마트 디지털시스템 설치
SW	지역특산물 판매시스템 구축 -홍보 프로그램 -판매교육 등	-방문의료 및 교육서비스 제공 -스마트 헬스정보체계 구축 등	-디지털시스템운영(실시간상하수도 누수관리 등) 안전생활업구축 및 제공
HAW	전문기양성, 실습 고급인력맞춤형 인턴십 지원 등	-주민공동체, 마을주민참여프로그램, 컨설팅교육 등	-주민모니터링사단단구성 등
지원대상	-성촉지역	-성촉지역	-지역활성화지역, 기초서비스보급최저지역
금액	-100억5년	-30억(5년) -50억(5년, 광역연계시설, 폐기물, 오염제거 등)	-20억(4~5년)
추진방식	-공모사업(지역발전투자협약) -5년사업계획수립 -컨설팅/주민연계	-지역수요맞춤형공모(플랫폼자율선택) -2개 이상 패키지계획 포함 -컨설팅/주민연계	-지역수요맞춤형공모 -상수도 안정화,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주민안축도 제고
비고	-관광업, 제조업, 농업, 식품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정량목표+생산, 연구기반 등)	-생활인프라 접근성 및 서비스 취약(응급의료 등) 개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취약성, 상하수도 광역연계 부족 등 개선 지원사업

49

02 성장촉진지역 사업유형 도출

2 지원사업 모델 예시(1)

- (목적) 지역상생형 지역플랫폼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역주민(대학생, 노인, 외국인)이 지역내 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숙박 등 자영업 종사자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제해결형 아이디어를 집적하고, 비즈니스화하여 일자리 선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원사업
- (역할) 전통시장, 자영업(숙박, 음식) 등의 생산성 확대(물품 유통을 위한 홍보, 관광객 배달서비스 등)를 위해 창업플랫폼(공간+교육+행재정지원)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대학, 마을주민, 노인 등) 창업과 스타트업, 벤처의 선순환을 청년을 포함한 마을공동체가 직접 조성할 수 있는 플랫폼
- (기능) 사회경제조직육성, 청년 일거리창출 및 대학생(졸업) 정착, 예비창업자 창업플랫폼 지원, 전통농업과 제조업에서의 업종전환 교육 지원 등
- (유형) 지역경제육성형(성장거점확산)으로 창업활성화지원



- 사업명 : 영천 도남농공단지 공동 스마트플랫폼 조성
- 총사업비 : 130억(중기부 2년간 40억지원)
- 연계기관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연계 스마트팩토리교육, 친환경차 부품전환 추진
- 사업내용
 -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51개사 4천여명(영세포함) 종사자를 위한 제조혁신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 인공지능 물류, 기업 공동 활용공간, 친환경 인프라 조성(개별기업 성장고도화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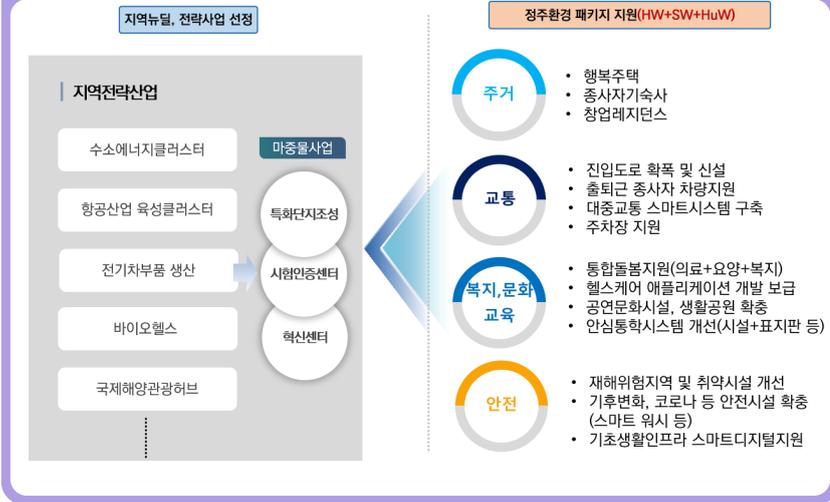
50

02 | 성장촉진지역 사업유형 도출

3 | 지원사업 모델 예시(2)

- (목적) 지역 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사업(정부추진 마중물사업)의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주, 교통, 문화복지, 안전 등 복합기능 생활SOC 기반 지원
- (역할) 특화단지, 센터(실험, 연구, 창업 등) 추진을 통해 지역의 전략 특화산업 육성을 기추진하는 지역(마중물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속성(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행복주택), 교통(대중교통연계), 복지문화(헬스케어), 안전(재해취약개선) 등의 통합패키지 지원
- (유형) 중앙정부 또는 시도 광역단위 전략산업육성(마중물)사업의 효과를 지역내(지자체)에서 극대화 및 확산하기 위해(일자리 확충 강화) 생활편의시설 확충(복합화)

지원모델2. 지역전략산업관련 정주환경 패키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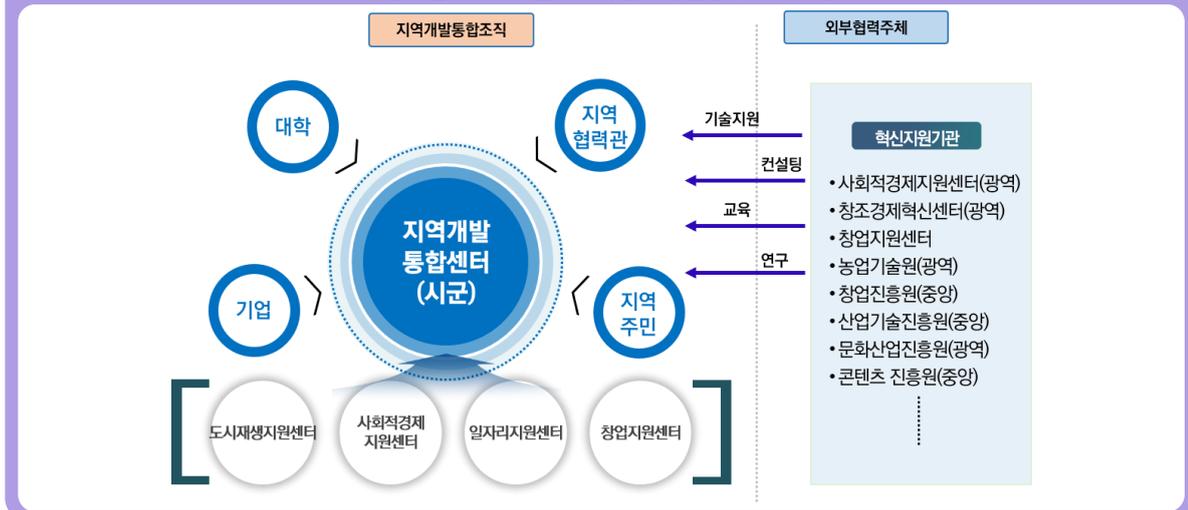
- 사업명 : 전주 광역버스 간이정류장
- 사업목적 : 전주혁신도시 신시가지, 공공기관 입주 이후 광역이동권 확보를 위해 간이정류장 설치
- 사업내용
 - 광역버스노선 연계, KTX 리무진 및 관광체험 시티투어 버스노선 연계자동차부품, 기계금속 51개사 4천여명(영세포함) 종사자를 위한 스마트 디지털 시스템 설치, 실시간 버스운행정보제공, 티켓팅(키오스크 활용)

02 | 성장촉진지역 사업유형 도출

4 | 지원사업 모델 예시(3)

- (목적) 지역마다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업, 도시재생센터 등의 지원조직을(법적, 자체) 통합화하여 성장촉진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역할) 지역개발통합센터(가칭)는 지역내 혁신자산인 지자체(지역협력관), 전략기업, 지역주민과 연합체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업, 사회경제적모델, 도시재생 등 분야별 지원사업 통합화
- (연계) 외부지원조직(광역 또는 중앙정부차원 혁신조직_중소거점도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센터, 산업, 문화, 콘텐츠 등 분야별 진흥원을 중심으로 인력, 교육, 연구, 컨설팅 등 지역수요에 부응하여 방문형 지원협력체계 구축
- (유형) 지역경제육성형(성장거점확산) 및 생활편의시설확충형(지속가능발전) 결합

지원모델3. 지역개발센터 통합조직 설립 및 운영지원





감사합니다